

#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2025. 4.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 목 차 〉

I. 검토의 필요성	1
1. 검토 배경	1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 구성 및 검토	2
II.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3
1. 헌법 및 법률 규정	3
2. 시사점	11
III.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12
1. 장애인 사법지원 관련 정책	12
가. 전체적 추진 경과	12
나.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 제도	12
다.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설치	15
라. 협조자 수당 제도	16
마.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17
1) 청각장애인	17
2) 시각장애인	19
3) 발달장애인	19
바. 기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20
1) 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형사증인신문 시범실시	20
2)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시설 개선	20

3) 장애인 관련 사건명부여 검토	20
2.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21
가.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의 사건 참여 예측	21
나. 전국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22
다. 시사점	26
3. 해외 사법부의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27
가. 미국	27
나. 독일	28
다. 영국	30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31
1.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31
가. 사법지원 의무 이행을 위한 규범과 시스템의 미비	31
나. 사법지원 인력의 부재 및 조직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부족	32
다. 법원 고유의 물리적 사법접근 보장 체계의 부재	35
라.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범위의 협소함	38
마. 지원이 필요한 비장애인을 현 제도에 포섭하기 어려움	39
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40
V.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등 제안	41
1. 규범의 제정 형식 및 방향	41
2. 주요 내용 제안	43
가. 사법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43
1) 사법지원 제공 영역: 법원이 관장하는 모든 사법절차와 서비스	43
2) 사법지원 대상자: 협약상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의 확장	44
나. 사법지원의 원칙(안 제3조)	46

1) 개별화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46
2) 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한 안내의무와 확인·고려의무	47
다. 접근성 보장 조치(안 제4조 내지 제6조)	48
라. 조직체계	50
1) 각급 법원의 조직: 사법지원책임관 및 사법지원관	50
2) 법원행정처 내 조직	51
3) 연수 및 교육 강화(안 제9조)	54
마. 사법지원 절차	54
1) 사법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	55
2) 사법절차에서의 사법지원 결정	55
3) 민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결정 규정 적용배제	56
4) 결정에 대한 고충민원	56
바.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58
1) 장애유형별 구체적 사법지원 사항 명시	58
2) 사법지원의 확장·강화	59
3. 사법지원예규안	61
VI. 사법부의 물리적 시설접근 보장체계 구축	70
1. 문제점	70
2.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	71
가. 관련 법률	71
나. 내부 규정	75
3. 물리적 시설접근 보장체계 구축 방안	76
가. 관련 규정 형식	76
나. 법원의 특유한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 마련	77

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의 실시	78
라. 기준수립권자	79
마. 사법지원예규안	80
4. 그 밖의 시설접근 보장을 위한 방안	81
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81
나. 법원 웹사이트에서의 시설물 접근성 안내	82
VII. 사법접근센터의 사법접근·사법지원 총괄센터로의 기능 전환	83
1. 현행 사법접근센터의 문제점	83
2. 사법접근센터의 기능 전환 방안	86
가. 법원의 사법접근·사법지원을 총괄하는 센터로의 전환	86
나.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 강화	87
3. 사법접근센터 기능전환의 효과	88
4.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안	89
VIII. 공소장 등 장애정보 표기 방안	92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92
2.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93
3. 구체적 방안	95
가. 장애정보 표기: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 [별지4-1] 첨부	95
나. 표시 사항: 의사소통 관련 장애 여부 및 조력 여부	97
4. 시행 시기 등	98
IX. 피고인(피의자) 진술조력 방안	98
1. 검토의 필요성	98
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의 필요성	98
나. 피고인 등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관련 난점	99

다. 검토 방향 .....	100
<b>2.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현황 .....</b>	<b>100</b>
가. 개관 .....	100
나. 진술조력인 현황 .....	102
<b>3.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진술조력 제도 도입방안 .....</b>	<b>102</b>
가. 사건관계인을 위한 진술조력 제도 도입방안 .....	103
나. 진술조력인 조력 대상 확대 방안 .....	104
다.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106
1) 관련 법률의 정비 .....	106
2) 형사소송법 개정안 .....	106
3) 진술조력인의 재판절차 참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109
<b>4. 정책 결정 시 향후 계획 .....</b>	<b>113</b>
<b>X. 전문위원 제2연구반 논의결과 .....</b>	<b>115</b>
1. 일시 및 장소 .....	115
2. 회의 요지 .....	11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 .....	11

## I. 검토의 필요성

### 1. 검토 배경

#### ▣ 사법부의 사회적 약자 및 기본권 보호 역할

- 법원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책무가 있음
-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아래 II.항(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를 지님

#### ▣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종래의 노력

- 장애인 정책은 국가의 경제력 및 사회구성원의 인식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됨
  - 국가의 경제력은 접근성을 갖추기 위한 시설, 인력 등의 전제조건
-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국민의 인권감수성이 점차 커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 ⇨ 사법부도 그 무렵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2013년 장애인에 대한 헌법적 이념이 각급 법원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제도를 도입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고, 2014년부터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에게 우선적인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2019년부터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각급 법원에 설치하기 시작함. 그 외에도 시각·청각장애인 등 개별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점자문서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 ■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진단,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발간, 각종 정책의 시행·홍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에 대한 내부 인지와 제도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나아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질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여 포괄적인 사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사법부의 장애인 정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시점에서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 구성 및 검토

###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연구반

-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장애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법부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여 2024. 7.부터 2025. 1.까지 활동함
- 연구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법지원실(사법정책심의관실)의 검토 및 사법정책연구원 김동현 연구위원(판사/시각장애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반 구성

사법부 내부 구성원 (11)	판사(9)	강우찬(30기), 이혜림(34기), 장현자(37기), 권형관(40기), 김배현(41기), 정주희(변시3회), 김재원(변시4회), 이인화(변시5회), 강보라(변시6회)
	법원직원(2)	김형진(사무관), 박선아(실무관)
사법부 외부 구성원 (8)	유관기관(3)	권내전(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차경자(대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 이정아(법무부 소속 검사)
	변호사(3)	이주연(사단법인 두루, 41기), 김재왕(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시1회), 명노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시4회)
	학계(1)	차성안(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35기)
	장애인단체(1)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 검토 방향

- 우선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헌법, 법률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사법부의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통계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함. 해외 선진국의 사법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현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함
-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안함

## II.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 1. 헌법 및 법률 규정

#### ■ 대한민국헌법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살펴본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짐(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 장애인이 위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

#### <대한민국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up>1)</sup>

- 대한민국 협약 비준 (2008. 12. 11. 비준, 2009. 1. 10. 발효)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협약 준수 要

#### - 사법지원 관련 조항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하 ‘협약’ >

####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sup>2)</sup>”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1) 200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안이 작성되었고(우리나라도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협약 작성에 참여함), 2006. 12. 13. UN총회에서 채택, 2008. 5. 3. 발효됨. 세계 195개국 가운데 191개국이 위 협약을 비준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관한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규범임.

2) 이 보고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지칭하는 목표와 동일함. 다만, 공식적인 협약 번역문언에 따라 ‘보편적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인 디자인’으로 명시함.



- 특히, 2022. 12.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 가능 ⇨ 협약의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협약 선택의정서〉

##### 제1조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협약상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는다.

##### 제6조

-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당사국에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 수행 및 위원회에 대한 긴급 보고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방안 규정
- 사법영역에서의 차별에 관한 조항

- 유엔은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에 대하여 조약의 이행 여부를 심의·관리·감독하는 기구로 각 조약별 위원회를 두고 있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기구로 장애인권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2014년 제1차국가보고서, 2022년 제2·3차국가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심의하고 그에 대한 최종권해를 제시하였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4조 (차별행위)

-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장애인의 접근성 관련 법률

- 「지능정보화기본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보장 및 조치의무

- 2026. 1. 22. 「디지털포용법」으로 관련 내용 이관 예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디지털포용법>(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 법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부과

#### <장애인등편의법>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재판절차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인(제29조), 피고인이 농아인이거나 심신장애의 우려가 있을 때 필요적 국선변호인(제33조제1항)에 관한 규정
-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한 공판조서 낭독 청구권(제55조),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대행(제157조제3항). 청각·언어장애인 진술을 위한 통역(제181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 피해자 증인(제163조의2), 피고인(제276조의2)

### 민사소송법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62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역(제143조), 정신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당사자의 진술을 돕는 진술보조인(제1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조 (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원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43조 (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3조의2 (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2. 시사점

-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법원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임의적, 재량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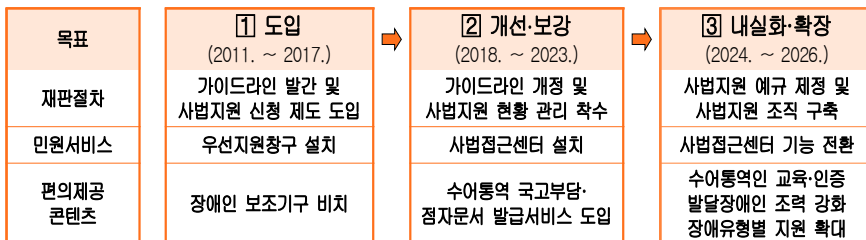
인 것이 아니라 **협약과 법률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불이행시 과태료, 위 법 제43조, 제50조)이 되고 손해배상, 적극적 구제조치 등 판결을 받을 수 있음(위 법 제46, 48조)
- 또한 법원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위 법 제23, 24조)
- 특히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라 개인의 진정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리 및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 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가 이러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현재 장애인 사법지원 정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II.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 1. 장애인 사법지원 관련 정책

##### 가. 전체적 추진 경과



##### 나.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 제도

###### ■ 제도 취지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 이행을 위해 사법절차·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 대상 및 절차

- **사법지원 대상:**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불편하다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법지원 대상에 해당
  - 질병·상해로 일시적으로 불편한 자, 고령자도 사법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의 참여 유형:** 모든 사건관계인
  -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이면, 당사자, 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 참여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방청인도 국고부담의 수어통역을 신청할 수 있음(다만 재판기일 7일 이내에 신청하였고, 절차진행 방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제공절차:** 신청 또는 재판부 직권에 의함
  - ① 장애인: 재판부에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별지1-1]** 제출
    - 장애인은 신청서에 편의제공 방법을 특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물적·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다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참고] 신청서에 명시된 편의제공 수단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활동(이동) 보조인력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보조인력 <input type="checkbox"/>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기구
<input type="checkbox"/> 수어통역 <input type="checkbox"/> 농통역사 통역 <input type="checkbox"/> 문자통역 <input type="checkbox"/> 보청기/음성증폭기/헤드셋
<input type="checkbox"/> 점자문서 [신청 문서: ○관결문 ○기일통지서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인신문서(단 소장 등에 첨부된 증거 등의 첨부서류는 점자로 제공되지 않음)] [형태: ○종이 인쇄물 ○전자점자파일 ○테이퍼(DAISY) 파일]
<input type="checkbox"/>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input type="checkbox"/> 확대경 <input type="checkbox"/> 화면낭독 가능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컴퓨터에서 낭독 가능한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한 지원 [수기 기재: _____]
※ 다만, 해당 법원의 물적·인적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② 재판부: 장애인 사법지원신청 **허가(직권결정 포함) 또는 불허가**

- 장애인 해당 여부 및 사법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결정문은 없음
- (법원의 추가자료 제출요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불허가 사유) (i) 신청한 내용대로 사법지원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ii) 필요성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iii)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 경과**

- 2013. 가이드라인 발간 및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 제도 도입
  -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1기 구성 ⇒ 재판절차마다 각 단계에서 장애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사법지원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발간(2013. 7.)
  -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법지원 신청 제도 도입 및 신청서 양식[별지1-1] 신설
- 2020.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2기 구성 ⇒ 법령개정사항 및 그간 법원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수단을 일부 수정한 개정판 발간
- 2023. 사법지원 현황 통계 취합 착수 및 형사공판 재판사무시스템 개선
  - 형사공판 재판사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사법지원 현황을 입력·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건의 사법지원 현황은 각급법원에 수기 통계 취합 요청
  - 그 외 사건의 재판사무시스템은 차세대 재판사무시스템 안정화 이후 개선 예정

**■ 사법지원 제도 안내 등 홍보**

- 사법지원 제도가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 및 사법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 필요
- 2020. 장애유형·사법지원 방법 등을 요약한 책받침 자료 각급법원 배포
- 2021. 사법지원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유튜브 광고, 리플릿 배부 등)

- 2023. 네이버 브랜드검색 광고 실시
- 2024. 6. 각급법원에 사법지원 안내 및 현황 공유 공문 시행
- 2024. 7.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플랫폼(시각장애인 커뮤니티) 내 홍보 시행
- 2025. 1. 형사공판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서」[별지1-2] 개정: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 신설 및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첨부(재판양식 조회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재판사무시스템 연동은 형사전자소송 도입 후 2025. 9. 1. 예정
- 2025. 2. 「장애인 등 사법지원」 코트넷 게시판 및 메인 배너 신설
- 2025. 3. 장애인 사법지원 실무 매뉴얼 및 동영상 각급법원 배포·게시 예정
- 2025. 민사절차 등 주요 절차 재판절차 안내서에 사법지원 안내 및 신청서 첨부 예정

**다.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설치**

**■ 취지**

- 장애인 및 그 밖에 사법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고령자, 외국인, 이주민 등)의 사법접근 제고를 위해 민원서비스에서 특별하고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함
  - 이들의 우선적 지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외의 사람들을 지원함

**■ 사업 내용 및 추진 경과**

- 우선지원창구
  - 법적 전문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sup>4)</sup>이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민원상담(재판절차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
  - 201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34개 창구 설치(2025. 2. 28. 기준)
- 사법접근센터
  - 우선지원창구와 함께 유관기관 상담창구, 법률상담창구 등을 구비하여 민원

4) 통상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개업하지 아니한 사람(주로, 법원에서 국·과장직에서 퇴직한 사람) 중 위촉함.

상담 외 여러 법률적·그 밖의 분쟁 해결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 2019. 수원법원종합청사를 시작으로 9개 센터 설치(2025. 2. 28. 기준)

#### ■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의 비교

	우선지원창구	사법접근센터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이 뛰어난 곳(종합민원실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됨</li> <l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며,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를 비치함</li> <li>■ 주요 기능은 상담 ⇨ 상담창구가 1개(우선지원창구) 또는 여러 개(사법접근센터)로 구성</li> <li>■ 우선이용대상자(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외 민원인에게 지원 제공</li> </ul>	
상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재판절차 상담)</li> <li>■ 법률상담창구: 법률상담(법리적 상담)</li> <li>■ 유관기관상담창구: 가정폭력, 세무, 노무, 자산관리 등(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름)</li> </ul>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민원실 서무계에서 관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 별도 배치</li> </ul>

#### 라. 협조자 수당 제도

##### ■ 취지

- 혼자서 의사소통 또는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이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재판절차·협의이혼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협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수당액 결정: 재판부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
  - 협조자수당 = 지원시간(이동시간, 대기시간, 재판시간 포함) × 시간당 수당<sup>5)</sup>

##### ■ 추진 경과

- 2014. 협조자수당 신규예산 편성 및 제도 시행

5)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활동지원급여 지급임(2024년 기준 16,150원).

- 2024. 협조자수당 지급기준 개선하여 각급법원에 공문 시행
- 2025. 이동지원·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 협조자 풀 구축방안 검토 예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sup>6)</sup>에 의한 활동지원사,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인력, 의사소통보조인력 등의 협조자 풀을 구축해 법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 마.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 1) 청각장애인

■ 2020년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시행 ⇨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신설 및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2020-2) 제정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함
- 적용절차: 법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절차
- 제공대상: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 또는 방청인
- 재판부의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要
  - 장애인이 수어통역인을 대동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수어통역인 지정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수어통역비용은 받을 수 없으나 협조자수당은 지급 가능

■ 2020. ~ 2023. 주요 재판절차(형사·민사·가사·행정)를 쉬운 말과 수어로 제시하는 법률용어수어집 개발·배포

■ 2024. 7. 각급 법원 수어통역인에 농통역사 확보 + 사법지원에 ‘농통역’ 추가

- 수어통역사는 청인으로,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반면, 농통역사는 농인과 수어통역사 사이에서 한번 더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어로 중계통역을 제공함
- 수어통역사가 주로 사용하는 수어는 청인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인 수어와는 차이 존재 ⇨ 농학교 등 특수교육 기회가 부족

6)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기준 2조 4,579억 원임. 각 장애인복지관 등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법원 이동지원은 ‘사회활동’으로 활동지원급여항목에 해당함.

한 농인들은 청인 수어통역사의 수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청인 수어통역사와 숙련된 농통역사가 짝을 이루어 청인의 수어통역을 다시 농통역사가 농인들의 수어로 전환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이 필요함

## ■ 2024. 12.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 향후 교육, 인증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 예정

- 2024. 8. 법정수어통역인 시범교육(1박 2일, 20명 대상) 실시
- 2025년 수어통역인 교육·인증제도 시행 예정(신규예산 편성 완료)

## ■ 2025. 1. 공소장 수어통역 영상녹화물 제공 등

- 문해력이 낮은 청각장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수어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수어통역 영상으로 제공함
- 2025. 1.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이하 ‘수어통역예규’) 개정하여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 및 문서에 대한 수어통역 근거 마련
- 수어통역인에게 미리 제공해야 할 통역에 필요한 서류(공소장 등) 명시

## ■ 중요 재판양식에 대한 수어·음성지원동영상 QR코드 삽입

- 청각·시각장애인 등이 조기에 사법지원제도를 인지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재판절차 안내서 양식에 그 내용을 수어통역 및 음성으로 제공하는 QR코드를 삽입함
- 2025. 1. 형사 중요양식에 탑재 완료 ⇒ 그 외 절차의 중요 양식도 순차적으로 개발 예정
- 형사절차 수어·음성지원영상 탑재 양식
  -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서[별지1-2] / 의견서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 / 구속적부심청구에 관한 안내 / 증인지원절차신청서(취약증인)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국민참여재판안내서 /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 [참고] 수어·음성지원 큐알코드 및 영상화면(예시)



## 2) 시각장애인

### ■ 2020. 10.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판결문, 기일통지서 등 점자문서 발급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 중요 문서 점자문서 제공
- 대상 서류: 판결서, 기일통지서, 피고인소환장 중 신청하는 서류
- 제공 형태: 점자문서(종이인쇄물), 전자점자파일, DAISY파일(음성파일) 중 선택

### ■ 2024. 7. 점자문서 대상 서류 확대 ⇒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공소장 포함), 답변서, 준비서면, 증인신문서함 포함

## 3) 발달장애인

### ■ 이해하기 쉬운 재판절차 안내서 및 법률용어 등 개발 위한 연구 수행

- 2024. 5.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 2024. 7.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자료 개발 연구」(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 2025. 2.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 ■ 2025년 이해하기 쉬운 재판절차 안내서 및 법률용어 등 순차적 개발 예정

- 2025. 2.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기초편) 제작 위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 2025. 3. 이해하기 쉬운 형사절차 안내 동영상 제작 계약 체결 예정

#### ■ 2025년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조력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예정

### 바. 기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 1) 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형사증인신문 시범실시

- 2024. 7. 31. 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형사 영상증인신문 시범실시
  - 서울권역 내 각 지방법원의 형사사건으로 장애인 증인의 소재지가 서울인 사건
  - 협약기관(8곳) 내 중계시설에서 영상증인신문으로 참여 가능
    - 증인지원관 출장 지원 제공(정신장애인의 경우 보안관리대원 동반 출장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중앙·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시범실시 운영 경과를 분석한 후 전국 확대 검토 예정

#### 2)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시설 개선

- 유니버설디자인은 비장애인, 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 누구든지 접근·이용가능한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건물·시설 등 모든 물적 인프라의 지향점임
  - 특히 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의 적용대상임에도 법정 등 **법원 고유의 시설에 특화된 기준이 없으므로** 이러한 기준 마련 및 그에 따른 **점진적 개선** 필요
- 2025. 2.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수립방안」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
  - 건축전문가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방문조사를 거친 후 법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침과 디자인 및 구축 법원의 개선 로드맵을 제안하는 연구임
- 2025. 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배리어 프리 위한 표준적인 법원과 법정모델 연구」 발간 예정
- 연구 결과 및 예산 등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설개선 추진 예정

#### 3) 장애인 관련 사건명 부여 검토

- 통계 수립·사법연감 등 공개를 위해 사건명 부여 검토 예정(2025년)

-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의 예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임시구제조치 및 적극적 구제판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인차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학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 2.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 가.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의 사건 참여 예측

#### ■ 전국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2023년 기준)

장애유형	총인구 대비(%)	소계(명)	심한장애(중전1-3급)	심하지않은장애(중전4-6급)
합계	4.99	2,586,024	947,806	1,638,218
지체	2.19	1,136,423	217,227	919,196
시각	0.47	243,963	44,453	199,510
청각	0.82	423,976	83,322	340,654
언어	0.04	22,299	11,057	11,242
지적	0.43	224,269	224,269	-
뇌병변	0.45	232,660	131,352	101,308
자폐성	0.08	41,442	41,442	-
정신	0.19	99,471	98,135	1,336
신장	0.20	104,560	77,549	27,011
심장	0.01	4,798	3,557	1,241
호흡기	0.02	10,575	10,052	523
간	0.03	15,329	637	14,692
안면	0.01	2,695	1,337	1,358
장루·요루	0.03	16,705	1,540	15,165
뇌전증	0.01	6,859	1,877	4,982

#### ■ 장애인의 사건 참여 비율 예측

7)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01\\_11761](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01_11761)) 참조.



- 장애인이 사건관계자로 참여한 비율은 통계 추출 불가 ⇨ 장애인인구 비율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의 상담 비율로 예측해 볼 수는 있음
-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2023년 기준 51,774,521명) 대비 약 5% ⇨ 다만, 장애인의 경제활동<sup>8)</sup>, 사회적 관계 위축 고려 시 소송참여비율은 더 낮을 것임
- 전국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의 2023년 상담 건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상담(66,759건) 대비 장애인 상담(1,602건) 비율은 약 2.4%
- 장애인의 사건 참여 비율 예측

	총 사건수	장애인구비율(5%) 적용 시	장애인 상담비율(2.4%) 적용 시
전체사건	16,399,629	819,981	393,591
소송사건	6,667,442	333,372	160,018
본안사건	1,266,734	63,336	30,401

## 나. 전국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sup>9)</sup>

### ■ 전국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건수

- 총 131건 제공(신청에 의한 제공 67건, 직권제공 64건)
- 사법지원 미제공 법원: 80개 법원 중 44개 법원
- 5건 이상 제공(8): 서울남부지법(20건), 서울중앙지법(12건), 서울북부지법(8건), 대전지법(8건), 서울가정법원(7건), 안양지원(6건), 서울동부지법(5건), 부천지원(5건)
- [참고] 각급 법원 통계 현황

연번	법 원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 (B)	합계 (A+B)
		허가 건수(A)	불허가 건수		
1	대법원	1	-	-	1
2	서울고등법원	1	-	-	1
3	서울중앙지법	5	-	7	12
4	서울가정법원	3	-	4	7

8)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율은 34%로 전체 인구고용률인 63.3%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되었음. 이에 관하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참조.

9) 2023년 전국 법원(지원 포함 총 80개 법원)에 요청하여 수기로 작성·취합한 통계의 분석 결과임.

연번	법 원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 (B)	합계 (A+B)
		허가 건수(A)	불허가 건수		
5	서울행정법원	-	-	-	0
6	서울회생법원	-	-	-	0
7	서울동부지법	3	-	2	5
8	서울남부지법	14	-	6	20
9	서울북부지법	6	1	2	8
10	서울서부지법	1	-	-	1
11	의정부지방법원	2	-	-	2
12	고양지원	-	-	-	0
13	남양주지원	-	-	3	3
14	인천지방법원	-	-	2	2
15	인천가정법원	-	-	-	0
16	부천지원	1	-	4	5
17	수원고등법원	-	-	-	0
18	수원지방법원	-	-	2	2
19	수원가정법원	-	-	-	0
20	수원회생법원	1	-	-	1
21	성남지원	-	-	-	0
22	여주지원	-	-	-	0
23	평택지원	3	-	1	4
24	안산지원	1	-	1	2
25	안양지원	-	-	6	6
26	춘천지방법원	4	-	-	4
27	강릉지원	3	-	-	3
28	원주지원	-	-	-	0
29	속초지원	-	-	-	0
30	영월지원	-	-	-	0
31	대전고등법원	-	-	-	0
32	특허법원	-	-	-	0
33	대전지방법원	4	-	4	8
34	대전가정	-	-	1	1
35	홍성지원	-	-	-	0
36	공주지원	-	-	-	0
37	논산지원	-	-	-	0
38	서산지원	-	-	-	0
39	천안지원	-	-	-	0
40	청주지방법원	-	-	3	3
41	충주지원	-	-	-	0
42	제천지원	-	-	-	0
43	영동지원	3	-	-	3

연번	법 원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 (B)	합계 (A+B)
		허가 건수(A)	불허가 건수		
44	대구고등법원	-	-	-	0
45	대구지방법원	-	-	4	4
46	대구가정법원	1	-	2	3
47	대구서부지원	-	-	1	1
48	안동지원	-	-	-	0
49	경주지원	-	-	-	0
50	포항지원	-	-	-	0
51	김천지원	-	-	-	0
52	상주지원	1	-	-	1
53	의성지원	-	-	-	0
54	영덕지원	-	-	-	0
55	부산고등법원	-	-	-	0
56	부산지방법원	-	-	4	4
57	부산가정법원	1	1	1	2
58	부산회생법원	-	-	-	0
59	부산동부지원	-	-	-	0
60	부산서부지원	-	-	-	0
61	울산지방법원	-	-	-	0
62	울산가정법원	1	-	-	1
63	창원지방법원	1	-	-	1
64	마산지원	-	-	2	2
65	진주지원	-	-	-	0
66	통영지원	-	-	-	0
67	밀양지원	-	-	-	0
68	거창지원	-	-	-	0
69	광주고등법원	1	-	-	1
70	광주지방법원	1	-	1	2
71	광주가정	-	-	-	0
72	목포지원	2	-	1	3
73	장흥지원	-	-	-	0
74	순천지원	-	-	-	0
75	해남지원	-	-	-	0
76	전주지방법원	-	-	-	0
77	군산지원	-	-	-	0
78	정읍지원	-	-	-	0
79	남원지원	2	-	-	2
80	제주시방법원	-	-	-	0
합 계		67	2	64	131

■ 재판절차별·사건관계 유형별 사법지원 현황

● 사법지원 활용도 높은 절차 및 장애인의 사건 참여 유형

- 재판절차 ⇨ 형사사건(60.3%), 사건참여유형 ⇨ 당사자(86.0%)로 가장 높음
- [참고] 재판절차별 사법지원 현황

구 분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B)(비율)]	합 계 [건수(A+B)(비율)]
	허가[건수(A)(비율)]	불허가[건수(비율)]		
민사절차	24(35.8%)	0	9(14.1%)	33(25.2%)
형사소송 절차	33(49.3%)	1(50%)	46(71.9%)	79(60.3%)
가사소송 절차	8(11.9%)	1(50%)	8(12.5%)	16(12.2%)
협의를혼 절차	0	0	0	0
행정소송 절차	0	0	0	0
특허소송 절차	0	0	0	0
회생·파산 절차	2(3.0%)	0	0	2(1.5%)
소년보호사건	0	0	1(1.5%)	1(0.8%)
합 계	67(100%)	2(100%)	64(100%)	131(100%)

- [참고] 장애인의 소송관계 유형별 사법지원 현황

구 분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B)(비율)]	합 계 [건수(A+B)(비율)]
	허가[건수(A)(비율)]	불허가[건수(비율)]		
당사자	60(85.7%)	2(100%)	56(86.2%)	116(86.0%)
소송대리인	1(1.4%)	0	0	1(0.7%)
중인	9(12.9%)	0	8(12.3%)	17(12.6%)
방청인	0	0	0	0
소년보호절차	0	0	1(1.5%)	1(0.7%)
합 계	70(100%)	2(100%)	65(100%)	135(100%)

■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사항별 사법지원 현황

- 청각장애(66.3%), 언어장애(22.3%)가 지원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이며, 편의 제공 사항도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수어통역(73.7%)이 가장 많음
- [참고]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제공 현황

구 분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B)(비율)]	합 계 [건수(A+B)(비율)]
	허가[건수(A)(비율)]	불허가[건수(비율)]		
지체장애	3(3.3%)	0	0	3(1.8%)
뇌병변장애	4(4.3%)	0	0	4(2.4%)
시각장애	5(5.4%)	0	0	5(3.0%)
청각장애	53(57.6%)	2(100%)	57(77.0%)	110(66.3%)
내부기관장애	1(1.1%)	0	0	1(0.6%)
언어장애	20(21.7%)	0	17(23.0%)	37(22.3%)
지적장애	3(3.3%)	0	0	3(1.8%)

구 분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B)(비율)]	합 계 [건수(A+B)(비율)]
	허가[건수(A)(비율)]	불허가[건수(비율)]		
자폐성장애	1(1.1%)	0	0	1(0.6%)
정신장애	2(2.2%)	0	0	2(1.2%)
기타	0	0	0	0
합 계	92(100%)	2(100%)	74(100%)	166(100%)

- [참고] 편의제공 사항별 사법지원 현황

구 분	신청 건수		직권결정 [건수(B)(비율)]	합 계 [건수(A+B)(비율)]
	허가[건수(A)(비율)]	불허가[건수(비율)]		
활동(이동)보조인력	3(4.2%)	0	0	3(2.2%)
의사소통 보조인력	5(6.9%)	0	0	5(3.7%)
확대경(독서확대기)	2(2.7%)	0	0	2(1.4%)
화면낭독 프로그램	0	0	0	0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2(2.7%)	0	0	2(1.4%)
보청기·음성증폭기	6(8.2%)	0	5(7.7%)	11(8.0%)
수어통역	45(61.7%)	1(50.0%)	58(89.2%)	103(74.7%)
문자통역	6(8.2%)	1(50.0%)	2(3.1%)	8(5.8%)
필제어	2(2.7%)	0	0	2(1.4%)
점자문서	2(2.7%)	0	0	2(1.4%)
기타	0	0	0	0
합 계	73(100%)	2(100%)	65(100%)	138(100%)

## 다. 시사점

- 장애인은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어 사법지원 제도 인지, 이용이 어려움 ⇨ 법원의 직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홍보가 중요
- 장애인인구(전체인구 대비 5%), 우선지원창구 장애인상담(전체상담 대비 2.4%)에 비해 낮은 제공률 ⇨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 형사절차에서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 ⇨ 형사절차 초기 사법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일 공전 방지 및 장애인의 재판 만족도를 제고할 것임
- 형사절차 외의 절차, 당사자 아닌 소송관계인, 수어통역 외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법지원 활성화 필요 ⇨ 사법부 내외에 정확한 정보제공 등 홍보 필요
- 활용도 높은 수어통역의 질적 제고 위해 수어통역교육·인증제도 실시 필요

## 3. 해외 사법부의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 가. 미국

#### ■ 미국장애인법(ADA)에 의한 통합적인 장애인 지원에의 법원 포섭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 )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모델이 된 연방 법률로 1990년 제정됨. 공공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대부분의 법원이 ADA 및 이를 따르는 주법에 따라 사법지원을 하고 있음
- 연방법원의 사법회의정책(Judicial Conference policy)
  - 연방사법회의 공식지침인 사법정책가이드라인(Guide to Judiciary Policy, Vol. 5) ⇨ 의사소통 조력 및 보조기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으로, 연방법원과 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sup>10)</sup>

#### ■ 조직: ADA 코디네이터 및 위원회

- ADA 제2장은 50명 이상 근무하는 주 및 지방정부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ADA 담당자를 두며, ADA 담당자의 성명·연락처를 공개하도록 규정함<sup>11)</sup> ⇨ 법원에도 ADA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음
  - 주로 주 대법원, 항소법원, 조세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의 중앙사무처에 배치됨
  - 뉴저지주의 경우 537개 지방법원에 별도의 ADA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21개 상급법원의 코디네이터가 지방법원의 ADA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각급 법원 ADA 코디네이터 역할
    - ADA 준수를 위한 지원 및 AD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각종 민원처리 등 수행

10) Disability and the Federal Courts\_A Study of Web Accessibility(2019), <https://www.fjc.gov/sites/default/files/materials/24/Disability%20and%20the%20Federal%20Courts.pdf>

11) ADA Coordinator's Role, ADANW, <https://nwadacenter.org/toolkit/ada-coordinators-role>

- **법원행정처 ADA 코디네이터** ⇨ **ADA 정책 수립 및 법원 지원** 역할을 수행
  - 법원행정처에 ADA 관련 보다 세분화된 코디네이터를 임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 각급 법원 ADA 코디네이터의 ADA 관련 요청, 관련 민원 처리를 지원함
- **법원행정처 ADA 문제 내부위원회**(AOC Internal Committee for ADA Matters)
  - ADA 코디네이터와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 ⇨ ADA 관련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안건 회부 시 소집되어, 의사결정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함
- **ADA 이행을 위한 사법자문위원회**(Judiciary Advisory Committee on ADA Compliance)
  - 주 행정부 최고관료, 판사, 법원직원, 변호사, 주요 민간단체 대표자들로 구성  
⇨ ADA 정책·절차 개발 및 법원 내 ADA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기구

#### ■ 시설접근을 위한 법원 접근성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 가능한 법원 설계(Justice for All: Designing Accessible Courthouses)’ 권고안(2006)**
  - 법령에 따른 법원 접근성을 위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법원접근성자문위원회(Courthouse Access Advisory Committee, CAAC)의 권고
  - 아래에 관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권장사항을 제시함
    - 법원: 외부경로, 입구, 내부경로, 비상탈출수단, 특정기능영역(대기실/사무국/인터뷰실/회의실/대배심 등)
    - 법정: 출입구, 주통로, 접근가능경로, 방청석, 레일바, 배심원석, 증인석, 판사석, 서기석 및 법정경위석, 속기석, 가구, 판사실, 배심원심의실 등

#### 나. 독일

- **법원조직법** ⇨ **의사소통 방식의 선택권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체적 자료 제공을 규정

- 법원 심리에서의 청각·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제186조), 법원 심리 외의 형사절차에서의 통역(제187조), 시각장애인 등의 소송서류 등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제191조의a)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개별절차법이 아니 법원조직법에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규정하여, 절차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이 가능함
  - 청각·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 방식을 구두 또는 문자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권에 관하여 고지하도록 함<sup>12)</sup>
  -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변환할 책임이 법원과 검찰에 부여되며, 서면 등을 자신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sup>13)</sup>
  - 심리 외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가 있거나 독일어에

12) 제186조(1) 심리(Verhandlung)에서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Verständigung)은 그의 선택에 따라 구두로, 문자로(서면으로, Schriftlich) 또는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의 도움으로(mit Hilfe einer die Verständigung ermöglichenden Person) 이루어진다. 구두를 통한 또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법원은 적절한 기술적 보조장치(die geeigneten technischen Hilfsmittel)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선택권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13) 제191조의a (1)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은 서면(Schriftsätze)과 다른 문서(andere Dokumente)를 그가 인식 가능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들은 제2항에 따른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의 정함에 따라, 그들의 법원절차에서의 서면과 다른 문서들(Schriftsätze und andere Dokumente eines gerichtlichen Verfahrens)이 장벽 없이(barrierefrei,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맹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소송서류열람(Akteneinsicht)을 하는 경우, 그들은 제2항에 따른 법규명령의 정함에 따라 소송서류열람에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문 내지 제3문에 따른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다른 사람의 권리 주장(Wahrnehmung)을 위임받거나(beauftrag) 이를 위하여 선임된(bestellt)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인정된다. 위 규정들에 따른 장벽 없는 접근성 보장에 대한 비용은 정수되지 않는다.

(2) 연방법무부는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어떤 요건 하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제1항에 언급된 문서들과 당사자들에 의하여 소송기록으로 제출된 문서들에 대한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해질지,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이 그들의 권리 주장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어떤 식으로 협력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정한다.

(3) 전자문서들은, 그것들이 문자로서(in Schriftzeichen) 재현되는 한, 맹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장벽 없이(barrierefrei) 접근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의 제출이 보안 제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보안 제출방식은 장벽 없이(barrierefrei) 형성되어야 한다(Erfolgt die Übermittlung eines elektronischen Dokuments auf einem sicheren Übermittlungsweg, ist dieser barrierefrei auszugestalten). 전자양식(elektronische Formulare)이 도입되면(민사소송법 제130조의c,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14조와 노동법원법 제46조의f, 사회법원법 제65조의c, 행정법원법 제55조의c, 재정법원법 제52조의c), 이러한 전자양식들도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 경우 2011년 9월 12일자 장벽 없는 정보기술에 관한 명령(Barrierefreie-Informationstechnik-Verordnung)(연방관보BGBl. I S. 1843) 제3조에 의한 기준들이 각각의 해당 판(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에 있어 표준이 된다.

능숙하지 않은 경우, 필요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지정하도록 함

#### ■ 시설 및 정보접근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및 개선

- 독일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접근성’ (Barrierefreiheit) 이라는 제목하에 해당 법원 건물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 제공(건물 전체 접근성,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 화장실이 접근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
- 정보접근 관련하여, 소송서류에 대한 접근성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점 및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받는 절차·수단을 홈페이지에서 안내함
- 연방헌법재판소는 웹접근성과 관련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들을 열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홈페이지 웹접근성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락처를 별도로 안내함

#### 다. 영국

##### ■ 평등법(Equality Act 2010) 및 정신능력법(The Mental Capacity Act 2005)

-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2010년 제정된 평등법 일부로 포섭됨(장애에 대한 차별금지)
  - ① 규정/기준/관행, ② 건물, 설비 등 물리적 특성, ③ 보조장치 존재 등 3가지 유형에서 비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상당히 불이익할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신능력법을 두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 내 지침으로, 「정당한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정신적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북」(실무자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음

##### ■ 시설·정보접근에 대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에서 ‘접근/ 청각장애인 지원/ 시각장애인 지원/ 기타 시설안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웹접근성 지침에 대하여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나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음

##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 1.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가. 사법지원 의무 이행을 위한 규범과 시스템의 미비

##### ■ 사법지원은 헌법과 법률상 의무이며, 불이행 시 재판 및 협약상의 진정도 가능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특별히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차별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적극적 구제조치 등 판결도 가능
- 특히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라 개인의 진정 및 협약에 따른 조사도 가능
- 사법지원 의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임에도, 법원과 법원 직원의 본연의 업무인 재판(및 지원)과 성격이 달라 업무상 자연스럽게 인지하기 어려움  
⇨ 규범 제정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제도 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가이드라인 외에 사법부 구성원의 제도 인지를 위한 도구의 부재

- 2023년 전국 우선지원창구 장애인 상담비율을 기준으로, 장애인 사건 참여비율은 3만 건<sup>14)</sup> 이상으로 예측되나, 실제 사법지원 제공 건수는 131건에 불과
- 특히 80개 법원 중 44개 법원에서 사법지원 제공 사례가 전무함 ⇨ 사법지원 제도가 사법부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가이드라인 외에 사법부 구성원에게 제도를 인지시킬 도구가 필요함을 의미

##### ■ 협약에 따른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14) 장애인인구비율(5%)이 아닌, 2023년 우선지원창구 장애인 상담비율(2.4%)을 2023년 본안사건 수에 곱하여 산정하였음. 2023년 본안이 아닌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9만 건에 달함(본문 22쪽 표 참고).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제1차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23. 위원회는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법조인들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2013년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을 주목한다.

2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장애인 등은 이미 그 장애를 이유로 정보접근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 ⇨ 법원의 사법지원 제도 및 신청절차 등을 인지하고 적극 이용하기 어려운 특성 ⇨ 사법지원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나. 사법지원 인력의 부재 및 조직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부족

#### ■ 각급 법원에 사법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

- 사법지원은 결국 사람이 제공하여야 함 ⇨ 각급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① 각 재판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② 별도의 사법지원 인력이 지원 필요
- 각 재판부는 본연의 재판 업무 외에 사법지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거나, 각급 법원 내 가능한 지원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기 어려움
  - 재판부는 지원 방법, 법원 내 지원을 위한 자원(보조기구, 인력 등), 문의처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각급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심층인터뷰 결과<sup>15)</sup>
    - 재판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이 필요했다. 지원 단위에서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속기사

15) 임성택 외, 「각급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2021) 115-116쪽.

가 법정 스크린으로 문자통역을 제공하던지, 법원이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오전에는 속기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법대의 노트북은 법정 스크린과 연결되지 않아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민사법정인지, 형사법정인지에 따라서 시설 여건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문자통역이 모든 법원에서 가능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정신적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이 지원되는 경우, 사전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면담을 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곤란했던 경우가 있었다.
-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 책에서 찾아보고, 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경험이 있는 재판부 등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전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전담 부서 내지 직원에게 전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 사법지원에 관한 지식, 정보, 방안 등을 숙지하고 실행할 전담인력이 필요
  - [참고]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직원 2명을 ‘장애인 사법지원관’ (서무 겸임) 2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사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 ■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사법지원 관련 유기적 체계 구축 필요성

-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②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③ 사법지원, ④ 장애인 공무원 지원 등을 수행함
  - 법원행정처 내 장애인 관련 부서

소관 부서	관련 법률	담당 업무	구체적 업무 내용
시설담당관실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신축건물에 대한 BF인증 <sup>16)</sup> ■각급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법정보화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웹사이트, 응용소프트웨어의 시각 장애인 등의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복지후생담당관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공무원 지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직기준 마련, 교육 및 맞춤형 지원 등 근로지원
사법정책심의관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법절차·서비스에 서의 장애인 지원	■장애인 사법지원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점검

16)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각급 법원 내 위 업무들을 관리하며 법원행정처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담인력·조직 등 부재** ⇒ 편성 예산을 충실히 활용·집행하지 못함
- 매년 집행 저조로 감액된 예산항목

예산 항목	2021년 편성/집행	2022년 편성/집행	2023년 편성/집행	2024년 편성/집행
협조자수당	66백만원 편성/ 8.3백만원 집행	66백만원 편성/ 4.1백만원 집행	66백만원 편성/ 3.3백만원 집행	36백만원 편성/ 4.7백만원
접자문서 제공	20백만원 편성/ 2.8백만원 집행	20백만원 편성/ 0.2백만원 집행	20백만원 편성/ 3.5백만원 집행	10백만원 편성/ 0.2백만원

- 아래 예산의 경우 각급 법원의 재배정요청에 따라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예산 목적대로 충실히 활용하기 위해 각급 법원 내 담당자 지정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251백만원 편성): 시설 개선할 사항을 점검·확인 요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109백만원 편성): 현황 및 부족·교체할 보조기구 확인 요
-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설명회(71백만원):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소통 필요

#### ■ 법관 및 직원의 사법지원을 위한 충분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 사법지원은 결국 사람이 제공함 ⇒ 법관과 직원 등 사법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사법지원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임
- 협약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두 번의 심의 모두에서 법관·직원에 대한 훈련 강화를 권고하였음**
- 협약의 관련 조항

##### <협약>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2014년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중>

2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2022년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중>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과 2020년에 준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d) 법관과 법 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 ■ 불충분한 사법지원 교육의 현실 타개

- 사법지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별로 매년 1시간가량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외에 사법지원 관련 특화된 교육은 없음
- 그 외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관련 교육 현황
- 법관 연수 현황
  - 전문분야연수 ‘장애와 법, 법원’ (2020년부터 매년 6시간씩 2일간 진행)
  - 신입법관연수 중 장애인식개선교육(2시간)을 실시함
  - 경력별연수 과정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함
- 직원 교육 현황
  - 2023년 51기 신규임용후보자 대상 교육, 2023년 11월 민사실무자교육(8, 9급)에서 장애인사법지원 관련 1시간 특강이 실시된 사례 있으나 부정기적임
  - 그 밖에 장애인 사법지원에 특화된 교육과정이나 관련 정규교육과정은 부재함

#### 다. 법원 고유의 물리적 사법접근 보장 체계의 부재

##### ■ 사법지원과 사법접근의 관계

- 사법지원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는 개별적·사후적 조치임
- 반면, 사법접근은 모든 사람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정

보접근 등을 보장하고 조치하는 일반적·사전적 조치임

- 특히, 사법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절차 참여가 불가능함 ⇨ **사법접근은 사법지원 전에 선행·보장되어야 할 전제조건**에 해당

#### ■ 물리적 사법접근의 관리·점검체계 구축 필요성

-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실태조사·점검 등을 하도록 함
  - 법원청사도 공공건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적용대상임<sup>17)</sup>
- 그러나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는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화장실, 점자블록 등 일반적인 편의시설 기준만 명시 ⇨ 법원에 특화된 시설기준은 없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에 한 번 전수조사로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sup>18)</sup>를 실시하나 그 범위를 행정부로 제한하여 사법부를 제외함 ⇨ 실태조사 제외는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sup>19)</sup>가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의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 법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가 어려움

#### ■ 불충분한 기준·점검에 의한 법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필요

- 전국 법원 중 43개 법원에 대한 시설접근성 진단 결과<sup>20)</sup>

17)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중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 임성택 외, 앞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주8.) 10쪽.

20)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국 법원 43개를 장애인, 법률전문가들로 구성

- ※표시된 항목은 특히 미흡하다고 진단된 항목임

구분	조사항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주출입구	주출입구 접근	45	4	1
	경사로 유효 폭	35	1	2
	경사로 기울기	27	8	2
	경사로 추락방지	30	3	4
	경사로 손잡이	21	6	10
	점형블록설치	23	15	11
	점형블록상태	31	7	11
	※ 장애인 안내 호출벨	16	10	24
	※ 주출입구 종류	16	3	37
법정 출입	출입문 유효 폭	137	6	4
	※ 출입문 점형 블록	21	33	95
	※ 입구 점자 표지판	36	36	77
법정 내부(이용)	※ 방청석 장애인 좌석	54	31	63
	방청석 사이 통로	54	77	16
	법정 안 경사로	125	8	5
	법정 안 좌석 접근	58	57	13
	※ 법정 안 점자 유도 블록, 핸드레일	0	0	144
경매법정(이용)	※ 경매법정 문자시스템	3	6	15
	※ 경매법정 음성시스템	5	7	13
	※ 경매법정 서류 작성대	4	1	20
	경매법정 입찰서류제출	15	2	8
조정실 출입	※ 조정실 사전진행 안내판	3	6	34
	조정실 출입문 유효 폭	38	3	2
	※ 조정실 출입문 점형 블록	3	2	38
	※ 조정실 점자 표지판	9	2	32
조정실 내부시설	조정실 내부 휠체어 이동	34	7	0
	조정실 내부 탁자 접근	33	8	0
	※ 조정실 점자유도블록, 핸드레일	0	0	41
민원실 안내/접근	주출입구 종합안내도	8	22	12
	※ 민원실 점자 유도 블록	4	10	31
	민원실 입구 휠체어 접근	45	0	0
	민원실 입구 유효 폭	40	5	0

된 조사단이 방문 조사한 결과임. 이에 대하여는 임성택 외, 앞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주8.) 47-85쪽.

구분	조사항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민원실 이용	모든 청구 접근 가능 여부	32	11	1
	※ 민원실 안 접자 불록	0	2	41
	※ 장애인용 사건 검색대	6	4	32
	※ 사건 검색대 시각장애인 접근	5	3	22
	사건 검색대 휠체어 접근	15	7	9
증인지원실	출입문 유효 폭	27	1	0
	※ 출입문 점형 불록	2	0	26
	※ 입구 접자 표지판	4	2	22
	내부 휠체어 이동(여유공간)	18	8	0
	내부 휠체어 접근(여유공간)	14	13	2
면접교섭실	출입문 유효 폭	13	1	0
	※ 출입문 점형 불록	0	0	14
	※ 입구 접자 표지판	3	0	11
	※ 내부 휠체어 이동(여유공간)	3	0	10
	※ 내부 휠체어 접근(여유공간)	3	0	10

## 라.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범위의 협소함

### ■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요구하는 사법지원의 정도

-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 절차 및 서비스에 접근·이용·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요구되는 사법접근·사법지원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함
- 시설접근 및 정보접근 ⇨ 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불문하고 법원청사 및 시설과 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적·비전자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사법절차·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보조기구, 대체자료, 인력 등 지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 법원의 사법지원 현황 및 보완필요 사항

- (현황) 지체·뇌병변장애인 등을 위한 휠체어 구비 ⇨ (보완필요) 이동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구비 필요

- (현황) 시각장애인에게 특정 문서(판결문, 기일통지서, 상대방 제출 서류·증거 제의)를 점자문서로 제공 ⇨ (보완필요) 절차참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증거 등을 접근가능한 대체자료(한글과일 등) 형태로 제공 필요
- (현황)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농통역·문자통역 제공 ⇨ (보완필요) 지원항목과 병행지원됨을 미리 안내하고, 민원서비스에서도 통역 필요
- (현황)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신뢰관계인(형사절차), 진술보조인(민사절차) 동석 가능 ⇨ (보완필요) 심리적 안정에서 나아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의사소통조력인력 제도 필요

### ■ 협약의 권고사항 이행

- 이처럼 현재 법원의 지원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2년 제2·3차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법적 절차 전반에서의 개별화된 지원 및 대체수단 개발을 권고함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과 2020년에 준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b) 장애인이 법적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 제공 등 절차적인 조정을 취할 것
- (c)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접자, 수어, 읽기 쉬운 버전, 음성 및 화면해설과 같은 정보 및 의사소통의 보완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사법 시설에 대해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등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 마. 지원이 필요한 비장애인을 현 제도에 포섭하기 어려움

### ■ 가이드라인에 의한 비장애인의 신청 가능성

-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외에 고령자, 일시적인 질병·상해로 인해 불편한 사람도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에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고령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함)
- [참고] 가이드라인 17-18쪽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 모두 사법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사법접근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질병, 상해 등으로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경우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는 지속성 요건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더라도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접근하기 위한 사법지원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통상의 장애개념과의 충돌 ⇨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에 의한 지원 어려움

- 가이드라인은 지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장애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법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통상적인 장애인 개념과의 차이 존재
- 제도가 ‘장애인 사법지원’ 이므로 사법부 구성원들도 장애인 외의 대상이 포함된다고 인지하기 어려우며, 고령자, 부상자 등도 스스로 ‘장애인’ 으로 인식하여 사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움 ⇨ 비장애인의 포함에 대한 명확화 필요

## 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 ■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4가지 큰 주제로 잡음

#### ■ 사법지원 체계 구축 및 사법지원 확대·강화 ⇨ **규범 제정**(아래 V.항에서 상술)

- 조직체계(연수·교육 포함), 시설·정보접근 보장체계, 사법지원 절차 체계 구축
- 장애인 외 그 밖의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장
- 장애유형별 폭넓고 다양한 사법지원 보장

#### ■ 물리적 시설접근 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 ⇨ **사법부 자체적인 시설기준 수립 및 점검체계 마련**(아래 VI.항에서 상술)

- 법원 고유의 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개선 등 체계 구축

#### ■ 사법지원 담당 조직 설계 ⇨ **사법접근센터 기능 전환**(아래 VII.항에서 상술)

- (기존) 상당장구의 병합에 불과 ⇨ (전환) 법원 내 사법접근·사법지원 총괄 센터(해외사례 중 미국 ADA 코디네이터 역할 유사)

#### ■ 형사절차 초기 사법지원 강화 ⇨ **공소장 장애 정보 첨부**(아래 VIII.항에서 상술)

- 위 통계에서 본 것처럼 형사절차에서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나, 절차 초기에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1회 기일에서 사법지원 제공이 어려움
-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 등이 형사절차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장애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조력 강화 ⇨ **피의자·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 조력 확대방안**(IX.에서 상술)

- 정신적 장애인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진술조력 범위를 피해자 외의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하는 방안 및 그 밖에 의사소통 조력 제도 마련 필요

## V.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등 제언

### 1. 규범의 제정 형식 및 방향

#### ■ 제정 형식: 대법원 재판예규

- 현재까지 장애인 등 사법지원에 관련 사법부 내부 예규, 지침 등은 없음
  -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지 12년이 경과했으나 그 존재를 모르는 구성원이 다수임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제도를 인지시키기에 부족함
- 기존 연구반<sup>21)</sup>과 선행 정책연구용역<sup>22)</sup>은 사법지원 관련 대법원규칙 제정을 제안하였으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규칙은 재판장의 재판지휘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음 ⇨ 대법원재판예규를 통해 각급 법원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재판장의 재판지휘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함

#### ■ 예규 명칭: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안(이하 ‘사법지원예규안’)

21)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2기(2019-2020)에서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사법지원 규칙 제정을 제안하였음.  
22) 2012년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연구」, 2021년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각 연구용역에서 사법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을 제안하였음.



## ■ 제정 방향

- ① 주어진 인력, 예산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사법지원 체계 구축
  - 원칙: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합하는 사법지원의 원칙을 제시
  - 시설·정보접근성 보장체계: 사법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접근성의 지향점, 접근성 보장 조치 대상 및 방법, 절점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조직체계: 각급 법원의 사법지원 책임자와 실무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정책 조직 및 자문위원회 등 조직체계 구축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 사법지원 절차: 사법지원 신청, 결정 및 관련 민원 해결 등 구체적 절차 구축
- ② 사법지원 대상의 확장 ⇨ 협약의 장애개념 + α (부상, 임신·출산, 연령 등)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 예규에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요인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두 포함
  - 장애인 외에 부상, 임신,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법지원 대상이 됨 ⇨ 사법지원예규안 전체에서 ‘**장애인 등**’으로 명시함
- ③ 사법지원의 구체적 방법 제시 ⇨ 사법지원의 확장 및 제도 인지율 제고
  - 사법지원 대상자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및 참여 절차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사법지원 방법을 확장함
  - 이에 예규만으로 **장애유형별 사법지원의 핵심적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법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재판절차별, 진행단계별 상세한 지원방법은 가이드라인에 적시됨 ⇨ 예규와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을 명시함
- ④ 사법지원 관련 별도 예규안 제안 및 연계
  - 사법지원은 시설, 조직, 연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사법지원 방식이 모두 달라 관련 내용을 한 예규에 모두 담기 어려움

- 이에 아래 사항은 별도의 예규나 지침 등에 의하도록 하고, 사법지원예규안에서는 이러한 규범의 존재, 근거를 상기시키도록 함
  - 수어통역 관련 절차 ⇨ (현행) 수어통역예규
  -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 (신설)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에 관한 예규」<sup>23)</sup>
  - 사법접근센터의 사법지원관(장애인 전담인력)의 역할 담당 예정 ⇨ (신설) 「사법 접근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예규」

## ■ 사법지원예규안 구조

제1장 총론: 목적(제1조), 적용범위(제2조), 사법지원의 원칙(제3조)

제2장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시설접근성(제4조), 정보접근성(제5조), 보조기구(제6조)

제3장 조직: 조직체계(제7조), 민원처리에서의 사법지원(제8조), 연수 및 교육(제9조)

제4장 사법지원 절차: 신청등(제10조), 결정(제11조), 고충민원(제12조), 사건관리(제13조), 민원처리에서의 특칙(제14조), 협조자수당(제15조)

제5장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이동지원(제16조), 시각장애인등(제17조), 청각장애인등(제18조), 발달장애인등(제19조), 정신장애인등(제20조)

## 2. 주요 내용 제언

※ 이하의 예규안은 연구반에서 제안한 예규 초안을 실무지원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일부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향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규 제정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가. 사법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 1) 사법지원 제공 영역: 법원이 관장하는 모든 사법절차와 서비스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실현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특별히 제26조에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 ⇨ **법원조직법 제2조에 따라 법원이 관장하는 모든 사법절차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서 사법지원 필요**

23) 권형관,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 2.)에서 제안된 예규안임. 해당 연구보고서의 연구위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연구반의 반원으로서 이 예규안에 대하여도 연구반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안한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법원조직법>

#### 제2조 (법원의 권한)

-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권,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2) 사법지원 대상자: 협약상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의 확장

### ■ 사법지원 대상자 ⇨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장애인 ⇨ 예규에서 열거 여부 및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를 불문함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록은 사회보장급여 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장애 개념을 축소한 것이므로 사법지원 대상을 이에 한정해서는 안 됨
- 신체적·정신적 요인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우리나라 법률상 장애 개념요소인 장기간성, 제약의 상당성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참고] 우리나라 법률상 장애개념

(이하 표를 위한 여백)

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규정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2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제2조제4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 제1항)(단, 등록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개념 요소	신체적·정신적 손상 + 장기간 + 생활에 상당한 제약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 + 장기간 + 생활에 상당한 제약	신체적·정신적 장애 + 장기간 + 생활에 상당한 제약

- **비장애인** ⇨ ‘지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사유의 예시로 부상, 임신·출산, 연령(예: 노인, 아동 등)을 제시함

- 비장애인으로의 사법지원 확장에 관한 찬반 논의

장점	입장	찬성	반대
사법지원 대상의 확장 (부상, 임신, 연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상, 임신이나 고령 등 보편적 기능 저하의 경우에도 사법지원이 필요하며, <b>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b>을 고려하면 특히 그러함</li> <li>· 장애와 그 밖의 약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성도 찾을 수 없음</li> <li>· 장애인등편의법도 장애인, 임신부,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체계가 유사하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성 측면에서 사법지원 대상을 확장할 경우 부상, 임신, 고령자만 포함하고 외국인, 난민, 한부모가족,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외할 이유가 없음</li> <li>·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임신부 등을 포괄한 규범이 많지 않으며, <u>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는 것에 불과함</u></li> </ul>

- 검토의견: 다음을 이유로 **부상, 임신·출산, 고령 등으로 사유를 확장함**

- 부상, 임신·출산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연령의 사유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장애와 차이가 있으나, 그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 등에 의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장애와 동일한 반면, 외국인, 이주민, 한부모가족, 빈곤층 등은 그 사유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지원방법이 장애인 사법지원과 이질적임
-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때 장애 외의 사유로도 사법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법지원예규안에서 지원대상을 일괄 파악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비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예규에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나. 사법지원의 원칙(안 제3조)

### 1) 개별화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명시 ⇨ 부당한 편의 제공 요청 거절 가능(안 제3조제1항, 제6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sup>24)</sup>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지원 거부 가능
- 다만, **재판절차 참여 그 자체를 위한 지원**(예: 심리에서 소송관계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등)은 신청한 사항을 제공하기 어렵더라도 **대안적 조치 마련** 要
  - 협약 일반논평<sup>25)</sup>도 절차적 편의는 과도한 부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

#### <협약 일반논평 제5조 평등과 비차별>

25. (d) 사법에 대한 접근이라는 맥락에 있어 ‘절차적 편의’는 적절한 편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편의는 과도성의 개념으로 제한되지만, 절차적 편의는 그렇지 않다.  
 48. 협약 5조에 따른 적절한 편의의 의무와 12(3)조에 따라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에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 간의 주요 차이점은 12(3)조에 따른 의무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되어도, 그 지원을 위한 요건은 제한되지 않는다.

### ■ 개별화된 사법지원의 제공

-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지식·능력, 경험 등에 따라 필요한 편의가 다름 ⇨ 각자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지원이 요구됨
  - 협약도 사법절차에서 절차와 연령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25) 협약의 일반논평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의 해석기준으로서 사실상의 규범력이 있음. 본문 일반논평의 출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포털,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6호(2018) - 협약 제5조: 평등과 비차별」(2018. 4. 26.), 9쪽 및 15쪽.

#### <협약>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 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한 안내의무와 확인·고려의무

■ **신청·직권에 의한 사법지원 ⇨ 우선 신청을 위한 안내의무 부과(안 제3조제3항)**

- 법원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사법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법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은 사법지원 대상자의 의사에 의하여야 함
  - ⇨ 사법지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 **사법지원 절차 및 내용 안내** 필요
    - 협약 일반논평<sup>26)</sup>은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법지원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함
    - 다만, 사법지원 요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대상자와 협의할 것을 요구함

#### <협약 일반논평 제5조 평등과 비차별>

D. 적절한 편의에 관한 5(3)조 중

24. (b) 지금부터의 의무로서 적절한 편의는 어떤 장애인이 접근 불가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중략) 적절한 편의는 반드시 신청자와 협상되어야 한다. (중략)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장애인이 편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제공 의무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로 문제의 당사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 가능한 상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잠재적 의무 부담자가 어떤 사람이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물 제거를 위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야 했으나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 안내방식 ⇨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노력의무 부과
  - 발달장애인에게는 알기 쉬운 사법지원 신청서[별지3-2]에 의해 설명 가능

■ **형사절차 ⇨ 안내의무보다 강화된 확인의무 부과(안 제3조제4항)**

26) 장애인권리위원회, 앞의 일반논평(주25), 8쪽.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사소통 등 어려움 확인 및 구체적인 조력에 대한 안내 및 조치 의무가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공소장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별지4-1] 첨부함으로써 확인 가능(VIII에서 후술)

■ 사법지원 결정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확인·고려의무 부과(안 제3조제5항)

- 개별화된 사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법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의 특성, 장애유형과 정도 및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을 확인하도록 함
- 복합적·중복적 장애 ⇨ 모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편의제공 결정
  -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의 단순 결합이 아닌,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할 때 접근·이용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임<sup>27)</sup>

다. 접근성 보장 조치(안 제4조 내지 제6조)

■ 시설접근성(안 제4조) ⇨ VI. 물리적 시설접근 보장 체계 구축에서 상술

■ 정보접근성(안 제5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해 필요한 수단 제공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27) 예를 들면,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화면낭독프로그램, 수어 등은 무의미하고 촉각을 이용한 점자,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수어를 손으로 접촉하여 대화하는 촉수어, 잔존시력이 있는 경우 근접거리에서 수어로 대화하는 근접수어, 손가락 대화 등을 사용해야 함.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안 제5조제1항) 법률이 정하는 수단보다 정보접근의 수단을 상세화하되, 예산 등의 제약으로 모든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노력의무”로 명시함
  - 추가된 수단: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음성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 (안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지능정보화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에 따라 모든 사람이 법원이 설치·운영하는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접근성지침, 품질인증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사법정책연구원 김동현 연구위원(판사/시각장애인)의 다음 의견이 있었음
  - 안 제5조제3항의 접근성 지침의 예시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을 명시하였으면 함
  -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웹사이트의 설계, 개발, 검수까지 모든 과정에 시각장애인 실사용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접근성 미비 시 개선을 약속하는 내용 필요
    - 접근성 지침도 실사용자의 사용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일단 개발이 완료된 후로는 예산 등을 이유로 개선이 어렵기 때문임

■ 장애인 보조기구(안 제6조)

- 법원은 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과 사법정보에 접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구비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유지·관리해야 함
- 또한 재판절차 외 민원실과 상담창구 등에서 활용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사법지원을 하는 법원 직원 등을 위해 명칭, 사용법 등을 게시해 두도록 함



## 라. 조직체계

### 1) 각급 법원의 조직: 사법지원책임관 및 사법지원관

#### ■ (필수적 조직) 사법지원책임관 (안 제7조제1항)

- 사법지원과 관계된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자 필요
  - 법원에서 기존부터 해온 업무이나(새로운 업무부과가 아님), 지정된 책임자가 없어 전반적·통합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 필요
  - 사법지원 관련 업무

■ 각급 법원의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치·관리 등  
 ■ 수어통역인, 의사소통보조인력, 이동보조인력 등 지원인력 관리  
 ■ 우선지원창구 관리·운영  
 ■ 재판부 등 접근성을 위한 사전 조치  
 ■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사법지원 관련 교육  
 ■ 사법지원 통계 취합 등 사법지원 업무 관리

- 시설·교육·예산 등과 밀접한 관련 ⇨ ① **총무과장**을 겸임지정하도록 함
  -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사무과장, 대법원의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장이 겸임하도록 함(대법원을 제외하고는 법원보안관리대장 지정 방식과 동일)
- 다만, 사법접근센터 설치법원 ⇨ ② **사법접근센터의 사법지원책임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담당하도록 함
  - 사법접근센터를 법원의 사법접근·사법지원을 총괄하는 센터로 활용하기 위함
  - 현재 사법접근센터에는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배치하고 있음 ⇨ 겸임지정이 아닌, 전담으로서 사법접근·사법지원 실행 및 개선에 역량 집중 가능

#### ■ (임의적 조직) 사법지원관 (안 제7조제2항)

- 법원 내 사법지원을 조력·지원할 실무자로서 사법지원관이 필요하지만, 직제협의 등이 요구되므로 법원에 일괄적인 배치는 어려움 ⇨ **임의적 조직**

- 다만, 총무과장 등이 사법지원책임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의 업무경감 및 실무 지원을 위해 겸임형태로라도 사법지원관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 사법지원관의 역할: 아래 중 근무형태, 법원 현황 등에 따라 전부·일부 담당

- ‘**사법지원 코디네이터**’ ⇨ ① 사법지원 제공 및 재판부의 사법지원 요청에 따른 조력, ② 사법지원 전후로 대상자와의 소통·협의 등 수행
- **사법지원 준비** ⇨ 시설접근, 보조기구 비치·관리, 수어통역인 등 인력 관리 및 사법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
- **사법지원 현황 관리** ⇨ 사례 관리, 통계 취합 및 보고
- **사법지원 홍보·교육** ⇨ 사법부 내외 홍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 근무 형태 ⇨ 겸임지정·전임지정 또는 전문임기제 채용 가능

- 다만, 전임지정 또는 전문임기제 채용은 조직심의관실을 통한 직제협의 요
-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 1.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하고, 직원 2명(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과 각 서무사무관)을 겸임 지정한 사례 있음

### 2) 법원행정처 내 조직

#### ■ (필수적 조직) 사법지원정책책임관 (안 제7조제3항)

#### ● 법원행정처 내 정책을 담당할 중앙 조직의 필요성

- 각급 법원의 사법지원 담당 조직은 사법지원 실무 집행·사후관리에 집중할 것이므로, 아래의 정책적 선순환을 위한 법원행정처 중앙 조직 필요

①사법지원 정책 및 절차의 수립 ⇨ ②각급 법원의 사법지원 실무 집행 ⇨ ③각급 법원의 사후 관리(통계관리, 만족도 조사 등) ⇨ ④피드백 반영하여 사법지원 정책 및 절차 개선

- 사례 수집·관리, 점검 및 개선요청 등을 통해 각급 법원의 전반적인 사법지원의 질적 제고 및 법원 간 사법지원 편차 감소를 꾀할 수 있음
- 사법지원관은 장애유형 및 정도, 사법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법지원 방법이 매우 다양함 ⇨ 법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제언·조력



- 각급 법원 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문의 및 과도한 사법지원 요청 관련 민원·고충 처리 등 해결 지원
- 사법지원책임관·사법지원관에 대한 교육·훈련 ⇨ 사법지원책임관 등이 각급 법원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사법지원의 전문성 제고 가능
- 법원행정처에서 각급 법원의 사법지원 업무를 모두 관리·교육하기 어려움  
⇨ 고등법원 사법지원책임관 또는 사법지원관에게 업무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지원의 통계/사례 취합·관리와 사법지원 담당자 교육 업무는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 ⇨ 고등법원 사법지원(책임)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교육은 근거리인 관할 고등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편리함
  - 현재 기금 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관련 예산인 ‘사법서비스 제공 담당자 전문교육 및 워크숍’ 예산도 고등법원 단위로 재배정하고 있음

#### ■ (임의적 조직) 사법지원자문위원회 (안 제7조제4항)

##### ● 자문기구 설치 필요성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청취·반영 필요 ⇨ 이는 약자를 인권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협약에 따른 의무이기도 함
- 장애인권리위원회도 공공의사결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도록 권고함

##### <2022년 제2·3차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7호(2018)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장애인이 대표 단체를 통해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장애아동,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간성(intersex) 장애인, 여성장애인, 이주 장애인 및 난민, 자폐성장애인, 장애가 있는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별이 다양한 사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단체와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자문기구를 통해 사법지원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할 수 있음<sup>28)</sup>

- 정책 자문·심의기구 예시(아래 규정 참고)

##### <법원조직법>

##### 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해촉, 보수 및 관리·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양형위원회 운영 규정>

##### 제27조(자문위원 위촉) ⇨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 ① 위원회는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자문기구 명칭: 사법지원자문위원회

- 다만,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애인 등 사법지원자문위원회, 사법접근성 자문위원회 등으로 대체 가능

##### ● 자문기구의 효율적 설치·운영 필요 ⇨ 임의적 설치 및 구성의 자율성 확보

- 다만, 자문위원회가 법원 외부 시각 반영 및 법원 정책 점검 역할을 충실히

28)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제3기 시민사법위원회(2013) 산하 소수자보호분과위원회에서 법원 내 장애인 배려, 증인보호 개선, 통역인 인적자원 개발, 장애인 법원체험행사 추진 등을 하고, 가이드라인 점검, 장애인 사법지원 체험행사 주최, 증인지원 서비스 개선, 통역자원봉사자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자문기구가 역할을 하였던 사례가 있음.

하도록 외부위원을 과반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 3) 연수 및 교육 강화(안 제9조)

#### ■ ① 각급 기관 내 교육 ⇨ 사법지원 내실화 및 제도 정착 도모

- **(필수교육)** 소속 법관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교육내용: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이해, 가이드라인 및 사법지원예규안에 따른 사법지원 방법과 실무, 사법지원정책 추진계획 등 포함
  - 교육이 업무상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률상 의무교육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임의교육)** 해당 기관의 업무관련성 있는 자(민원상담위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위원, 상근전문심리위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 ② 연수·교육기관 내 필수 과정에 포함 ⇨ 사법지원 교육·훈련 강화

- 1시간 남짓의 각급 법원 내 교육으로는 사법지원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어려움  
⇨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필수과정(신임법관연수 및 경력별연수, 신규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 ■ ③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 사법지원의 전문성 제고

- 사법지원예규안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담당자(사법지원책임관, 사법지원관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에게 각급 법원 내 교육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 실시
  - 직무교육을 받은 사법지원 업무담당자는 다시 각급 법원 소속 직원 등에게 전문적인 지원 및 훈련 제공 가능
-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고등법원의 장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마. 사법지원 절차

### 1) 사법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

#### ■ 신청 방법: **(기존)** 신청서 ⇨ **(확대)** 구술,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

-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대상자가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수단(구술, 전화, 전자우편 및 기타)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함
- 사법지원관(신청서 작성·제출),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신청서 작성) 지원

#### ■ 양식 신설

- 비장애인용 사법지원신청서[별지3-1]와 알기 쉬운 신청서[별지4-2] 신설
- 사법지원확인서[별지3-3] 신설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함
  - 신청서 제출 외의 방법으로 사법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사항의 기록편철
  - 사법지원을 안내하였으나 미신청 또는 직권제공을 거부한 경우 기록에 남김
  - 사법지원 결정사항을 기록에 남겨 절차에서 누락 없이 지원하도록 함
  - 의사소통조력인에 대한 정보 기재 ⇨ 상급심 재판에서 해당 정보 활용 가능
  - 사법지원 결정에 대한 대상자 통지 여부를 기록에 남김(미통지 시 신청인이 법원의 무응답, 거부 등을 주장하며 진정할 수 있음)

### 2) 사법절차에서의 사법지원 결정

#### ■ 사법지원 결정에 대한 통지의무

- **통지의 필요성**
  - 사법지원은 그 대상자와의 충분한 소통, 협의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함
  - 사건관계인에게 사법지원 여부 및 그 지원방법을 알려 주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로 거절한 경우 항변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통지 요
- **통지 방법:** 대상자가 접근 가능한 방법이어야 함 ⇨ 문서, 전화, 구술,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다만, 대체적 편의를 제공하거나 사법지원을 거부하는 결정은 글의 형태로 그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함
- 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결정의 구체적 이유와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정보까지 통지하도록 함

### 3) 민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결정 규정 적용배제

■ 민원절차에서 사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편의제공 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면 족함 ⇨ 사법지원 신청·결정 규정 적용 배제

- 재판절차에서는 재판장에게 재판지휘권이 있으므로 사법지원 신청서 등 접수, 사법지원확인서 기재, 결정 및 통보 등이 필요하지만, 민원절차에서는 능률성과 신속성이 중요함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 제16조 (민원의 처리원칙)

①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후술할 고충민원 절차는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는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4) 결정에 대한 고충민원

■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필요성

- 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해 사법지원을 거부당한 장애인에 가능한 국내 절차를 거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 가능 ⇨ 법원 내 이의절차 마련 필요
- 재판절차 내 사법지원 거부·대체적 제공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모호함 ⇨ 경우에 따라 바로 협약상 진정 제기 가능 여지 있음
- 민사절차 ⇨ 항고 등으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항고의 대상<sup>29)</sup>이 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고,

29)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 여기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이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사항에 관한 신청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4항을 근거로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이 장애인인 아니거나, 대체적 제공을 한 경우 항고가 가능한지 의문임
- 형사절차 ⇨ 즉시항고를 규정한 외에는 항고 대상이 되기 어려움
- 법원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항고할 수 없으므로,<sup>30)</sup> 수어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법지원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수단도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수단이 되기 어려움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나(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는 진정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43조)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전제로 가능한 수단이며, 행정부가 시정명령의 형태로 재판사항에 개입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및 손해배상 판결(제48조)은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구제가 어려움

■ 이의제기 ⇨ 고충민원 처리 절차에 의함

- 사법지원의 부작위 또는 불합리한 거부는 고충민원 사유에 해당 ⇨ 별도의 제도 신설 없이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절차에 포섭하여 처리 가능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 제2조 (정의)

① 이 내규에서 “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2. 고충민원

각급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사법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30) 형사소송법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 **재판절차에 관련된 사안**이라도 고충민원 처리에 의해 합리적 해결 도모 가능
  - 사법지원 신청이 재판장의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사법지원이 거부되거나 누락된 경우 민원제기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부에 전달되고 구제 가능
  - 실질적인 재판사항의 경우 판단 불가 취지로 통지하고 종결 가능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8조 (처리 결과의 통지 등)**

④ 민원사항이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 증거, 양형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사법작용에 해당되어 직접 판단·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다른 구제절차에 관한 안내로 처리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바.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1) 장애유형별 구체적 사법지원 사항 명시**

■ **이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 등 장애, 부상,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이동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사법지원 명시: ① 편의제공 사항(휠체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보조인력), ② 보조견 및 보조기구 보장, ③ 재판장의 사법절차 내 사법지원 사항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17조)**

- 시각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사법지원 명시: ① 대체자료, 보조기구, 보조인력 지원, ② 기일정보 제공, ③ 상대방 등에 대한 제출 요청, ④ 재판장의 사법절차 내 사법지원·정보제공

■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사법지원 명시: ① 의사소통 수단, ② 복수 수단 선택에 대한 안내, ③ 재판

장의 사법절차 내 사법지원, ④ Easy-Read 판결서 제공

■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19조)**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사법지원 명시: ① 의사소통 조력 수단, ② 의사소통 조력 관련 고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③ 재판장의 사법절차 내 사법지원, ④ Easy-Read 판결서 제공
  - 특히 **법률상 가능한 의사소통 조력수단**을 활용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함

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76조의2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2.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참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제26조제6항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지원
5.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참여
6. 기타 법령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 의사소통보조인력의 조력 등

■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20조)**

-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지원 및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 사법지원 명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거의 유사함

**2) 사법지원의 확장·강화**

■ **이동지원 ⇨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를 제공하도록 명시**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편의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므로 각급 법원별로 구비하도록 명시하였음

■ **시각장애인 등 ⇨ ① 대체자료 제공, ② 기일정보 제공**

- **(기존)** 판결서·기일통지서·상대방 제출 서류(증거제외)를 점자문서·전자점자파일·데이지파일로만 제공 ⇨ **(확장)** 모든 소송관련 서류를 다양한 방식의 대체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자료 형태

- 음성, 점자로 변환 가능한 전자파일(한글파일, 텍스트 추출되는 PDF파일 등)
- 음성자료 - 음성녹음파일 또는 보이스아이 등 전자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
- 점자자료 - 종이인쇄물과 전자점자파일을 포함함
- 큰 글씨 자료 - 저시력자를 위한

- **(강화)** 시각장애인의 재판상 권리 보장을 위해 대체자료는 가능한 한 소송서류와 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제공하도록 하였음

- 대체자료 제공을 위해 그 상대방 등에게 제출 서면 또는 신청한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전자파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기존)** 기일 관련 통지서는 신청에 따라 점자문서, 전자점자파일, 데이지파일로 제공함 ⇨ **(확장)** 다양한 접근 가능한 방식 중 선택해 간이한 제공 가능

- 기일통지의 효력을 위한 기존 문서 통지와 함께 시각장애인 등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이하게 기일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함

■ **청각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 Easy-Read 판결서 제공 가능**

- 의사소통 조력이 요구되는 장애인 유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명시하되, 다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제공’은 배제하였음

- 판결서 작성 방식은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이며, Easy-Read 판결서 작성 실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
-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지원예규안의 취지와 달리 고령자나 아동 등 문해력이 낮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음

-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예규」를 제정할 경우 예규 인용 가능 ⇨ **[별지2-4]** 예규안 참조

### 3. 사법지원예규안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가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 임신부, 고령자 등이 다른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 이용,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사법절차 및 이에 관하여 법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1.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소송절차와 조정·집행·비송·회생·파산절차 및 협의이혼절차
2.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에 관한 절차
3. 기타 법원이 법원조직법 제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관장하는 모든 절차

② 이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질병, 부상, 임신·출산, 연령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이때 장애는 이 예규에서 열거하는 장애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③ 이 예규는 장애인 등이 당사자, 증인·감정인 등 사건 관계인 또는 방청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으로서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장애인 등 사법지원 원칙)**

①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접근, 참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이하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을 “사법지원”이라 한다).

② 사법지원은 지원을 받을 사람(이하 “사법지원 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족, 대리인, 보조인, 소송대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한 있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도 사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이 예규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④ 형사절차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사법지원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사법지원 대상자의 특성,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을 확인하고, 사법지원 대상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지원의 방법을 결정한다. 복합적·중복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법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사법지원이 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조력 등 사법절차 참여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그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여 사법지원 대상자가 최대한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법원행정처장은 장애인 등 사법지원을 위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법지원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제2장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 제4조 (시설 접근성)

- ① 법원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원의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② 법정, 조정실, 민원실, 면접교섭센터 등 법원의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특히 법정은 법정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법정 내부의 당사자석, 증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석, 방청석, 판사석(법대), 검사석, 변호사석 등의 좌석에 대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 ④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법원 고유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제5조 (정보 접근성)

- ① 법원은 자신이 생산하거나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등이 그 외의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장애인 등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각종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③ 전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은 설치·운영·관리하는 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에 및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하여 장애인 등이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요구되는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한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한다.

- ④ 법원은 장애인 등이 그 외의 사람과 동등하게 법원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 (보조기구)

- ① 법원은 장애인 등 사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보유하되, 이를 전부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 기능이 동일한 보조기구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무지점자단말기 시각적 정보를 음성, 점자 등으로 변환하여 주는 기기
  2. 저시력자를 위하여 확대경, 광학독서기, 돋보기안경 등 물체를 확대할 수 있는 기기나 도구
  3. 음성증폭기, 보청기, 난청자용 헤드셋 등 청각보조 기기
  4. 휠체어 등 이동보조 도구
  5. 기타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 편의증진을 위한 보장구와 생활용품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유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법정, 민원실, 상담창구 등에서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유지·관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실과 상담창구에 비치되는 장애인 보조기구는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보조기구의 명칭과 사용법을 함께 게시한다.

## 제3장 조직

### 제7조 (조직)

- ① 각급 법원은 해당 법원에서 제2항 각호의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수행·관리할 사법지원책임관을 지정한다. 사법지원책임관은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책임관으로 하되,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총무과장(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은 사무과장)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사법지원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사법지원관을 1명 이상 지정,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사법지원관은 각급 법원 소속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1. 사법절차와 서비스에서의 사법지원 업무
  2. 제1호에 관하여 재판부, 각 과·실의 요청에 따른 지원 및 사법지원 대상자와의 연락, 소통
  3. 수어통역인 후보자 등 사법지원 인력 및 각종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관리·운영
  4.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
  5. 소속 기관 내 사법지원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제도·정책 홍보

6. 사법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소통, 협력
  7. 사법지원 통계 취합 등 사법지원 업무 관리
  8. 그 밖에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관련 제도·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업무는 각 고등법원의 사법지원책임관 또는 사법지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법부 사법지원정책 추진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사법지원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및 교육자료 마련
  3. 각급 법원 사법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4. 각급 법원 사법지원 통계 취합 및 관리, 업무 지원
  5. 사법지원 정책 수립·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의 소통, 협력
  6. 그 밖에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추진
-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예규에 따른 정책의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사법지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법지원자문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 (민원처리에서의 사법지원)

- ① 각급 법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지원을 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다면 이유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② 각급 법원은 장애인 등의 민원 처리와 사법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이하 “우선지원창구”라 한다) 또는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우선지원창구에는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갖춘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적인 민원상담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에 관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우선지원창구 또는 사법접근센터(둘 다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합접수실 또는 주무부서별 민원창구)에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기타 사법지원에 관한 각종 안내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연수 및 교육)

- ①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 법원의 장(이하 본조 내에서 “각급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법관과 법원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해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사법절차·서비스에서 장애인의 권리

3. 이 예규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법지원 방법과 실무
  4. 사법지원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민원상담위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위원(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상근전문심리위원 등 해당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신입법관연수 및 경력별 연수, 신규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교육 등 필수과정에 제1항 각 호에 대한 강좌 또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지원책임관, 사법지원관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등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고등법원장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
  2.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방법과 보조기구 사용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
  3. 그 밖에 사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제4장 사법지원 절차

##### 제10조 (사법지원 신청 등)

- ① 제3조제2항의 사법지원 신청은 사법지원신청서[전산양식]를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의 방법으로 전항의 신청을 한 경우 민원창구 접수담당자 또는 재판부 참여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법지원확인서[전산양식]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신청의 취지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법지원 대상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후 사법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제3조제2항 후문에 따른 사법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④ 각급 법원은 사법지원책임관 또는 사법지원관에게 이 조에 따른 신청 접수 또는 사법지원확인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사법지원 결정)

- ① 법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사법지원 대상자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지원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사법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 등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법지원확인서[전산양식]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에게 문서, 전화, 구술,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결정의 취지와 사법지원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결정이 사법지원을 하지 않거나 신청한 편의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제3항의 통지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 및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결정에 대한 고충민원)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법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신청한 사법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정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법지원책임관 또는 사법지원관을 민원처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전항에 의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 따른 민원은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1항제2호의 고충민원으로 본다.

#### 제13조 (민원처리에서의 특칙)

제8조에 의한 민원처리에서의 사법지원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사법지원 사건관리)

① 참여사무원 등은 이 장에 의하여 접수 또는 작성된 사법지원신청서, 사법지원확인서를 접수 또는 작성한 일자에 기록에 편철하고, 사법지원의 주요 내용은 전산상 입력하거나 또는 전자파일, 문서 등에 기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참여사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편철한 서류의 사본 및 사법지원 신청 또는 거부의 취지가 기재된 조서의 사본을 사법지원책임관 또는 사법지원관에게 송부한다.

③ 사법지원책임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 또는 그에 관한 통계
2.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신청 및 민원처리결과통지에 관한 서류
3. 제8조에 따른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사법지원 통계
4. 기타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 제15조 (협조자수당)

①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과 함께 제2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참여한 경우 법원은 협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방청만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는 등 해당 절차의 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협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의한 도움을 제공한 경우

② 장애인 등이 협조자를 데려오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 지원 또는 의사소통보조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협조자를 지정하여 사법지원을 하고, 그 협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조자가 법원 직원 또는 법원의 지휘·감독 하에 법원에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원까지 왕복 이동, 절차 참여 및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협조자의 전문성의 정도, 협조의 난이도, 물적 설비의 제공 등 특별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두 배의 범위에서 적절히 증액할 수 있다.
- ④ 참여사무원 등은 협조자수당지급의뢰서[전산양식]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재판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 제5장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 제16조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법지원)

① 법원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 또는 부상, 임신·출산, 연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지체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휠체어,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 이동보조인력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법원은 지체장애인 등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을 제한·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의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지체장애인 등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법지원을 한다.

1. 법정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소의 변경 또는 영상재판 진행
2. 절차 진행 중 휴식, 치료 등을 위한 휴게시간 부여
3. 출, 퇴근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 기일 지정

##### 제17조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① 법원은 시각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시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편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한다. 이때 시각장애인 등에게 송달하는 소송서류에 대하여 제1호의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 한 소송서류와 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때에 대체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대체자료”라 한다)의 제공
  - 가.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표준 텍스트파일을 권장함)
  - 나. 음성자료(음성녹음파일 또는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 전자적 표시에 의한 자료)
  - 다. 점자자료(중이인쇄물 또는 전자점자파일)
  - 라. 큰 글씨 자료
2.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또는 물체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3. 대독자(代讀者), 재판 진행을 설명하는 사람 등 보조인력의 지원
4. 그 밖에 시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하거나 확대하는 수단

② 법원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기일통지서, 출석요구서, 소환장의 송달에 대하여 기일에 대한 정보를 구술,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대체자료 그 밖에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대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자파일을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문서의 전자파일 또는 그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 전자파일
  2. 영상, 사진, 그림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전자파일
- ④ 재판장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하여는 사건관계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재판부, 소송관계자의 위치 등을 포함한 법정 공간에 대한 정보
  2. 재판부 숙의 등 소리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3. 발언 시작 시 발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4. 공소사실, 증거서류에 대한 낭독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설명
  5. 그 밖에 시각장애인이 재판 상황을 아는 데 필요한 정보
- ⑤ 재판장은 시각장애인 등이 녹음이나 영상녹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 제작 업무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① 법원은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의사소통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한다.

1. 수어통역, 농통역(청각장애인통역사에 의한 중계통역), 구화(口話)
  2. 문자통역, 실시간 속기, 필담(컴퓨터와 연결된 키보드, 종이와 펜 등 포함)
  3. 보청기, FM 수신기, 난청자용 헤드셋
  4. 안구마우스,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의사표현을 위한 그림카드 등)
  5.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 ② 재판장은 청각장애인 등에게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내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이 제공받을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의 의사소통 수단(예: 수어통역과 농통역,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보청기와 실시간 속기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제3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사법절차에서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절차에 참여하는 농인이 수인이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 경우, 수어통역인(농통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인별로 별도로 지정한다.

2.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심리인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30분마다 교대하게 한다.
  3.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기일 전에 공소장,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준비서면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공한다.
  4.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가능하면 심리를 영상녹화한다.
  5. 수어통역인이 아닌 농인을 바라보고, 가급적 쉬운 말로 천천히, 간결하게 말하며, 순차통역에 의한다.
- ④ 재판장은 청각장애인 등이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sup>31)</sup>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수어통역인 지정이나 수어통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다.

#### 제19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 ① 법원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발달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등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지원을 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76조의2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2.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참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제26조제6항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지원
  5.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참여
  6. 기타 법령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 의사소통보조인력의 조력 등
- ③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등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문이 있기 전에 검사, 발달장애인 등 본인, 보호자, 소송대리인 및 변호사 등에게 전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의사소통 조력·지원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 그의 진술 및 행동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그 발달장애인 등 본인, 변호인, 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발달장애인 등의 일반적인 진술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⑤ 재판장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31) 예규 미제정시 삭제 가능



1. 발달장애인 등에게 자유로운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발달장애인 등을 배제하고 그의 부모나 활동지원사 등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2.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절차를 설명, 진행하되, 발달장애인 등의 신체적 나이에 맞게 존중한다.
  3. 발달장애인 등이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진의 여부를 확인한다.
  4.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필요시 그림, 해부학적 인형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한다.
  5. 발달장애인 등의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변론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 ⑥ 제18조제4항은 발달장애인 등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0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① 법원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지원 및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하 “정신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인 등에게 자유로운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정신장애인 등을 배제하고 그의 신뢰관계인 등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2. 정신장애인 등에게 자유로운 진술 환경을 보장한다(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리장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정신장애인 등의 불안과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변론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4. 제3호를 위해 심리 중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정신장애인 등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와 휴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5. 기타 정신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지원 또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
- ② 재판장은 정신장애인 등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각 호의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조력·지원에 관한 제19조제3항, 제4항 및 제18조제4항은 정신장애인 등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Ⅵ. 사법부의 물리적 시설접근 보장체계 구축

### 1. 문제점

- 장애인등편의법과 그 하위 법령의 시설기준이나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법원 이용자의 시설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은 전술하였음
- 법원의 특유한 시설을 고려한 시설접근성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관련

된 규정을 사법지원예규안 제5조로 명시함

- 시설담당관실과 기술담당관실의 의견 조화 완료

## 2.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

### 가. 관련 법률

#### ■ 장애인등편의법

- 법원청사는 공공건물로서 장애인등편의법이 적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제7조)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sup>32)</sup>을 받을 의무(제10조의2)가 있음

#### 〈장애인등편의법〉

#####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32)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로서,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2015. 7. 29.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적용됨.



별표 1.

가.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이에 법원청사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BF인증 및 예비인증을 받고 있음

- 본인증 및 예비인증 현황(2024. 7. 1. 기준)

· BF 본인증 현황

등급	시/도	시군구	지역(시설)명	인증일자	인증만료일	인증기관
최우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5	2028-03-04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06-05	2029-06-04	한국부동산원
우수	경기도	파주시	파주등기소(시법원)	2020-02-17	2030-02-16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우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06-08	2031-06-07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일반	경기도	수원시	수원가정법원청사	2021-11-16	2031-11-15	한국부동산원
우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02-28	2033-02-27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우수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청사	2023-03-20	2033-03-19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우수	충청남도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	2021-03-22	2031-03-21	한국부동산원
우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북부광역등기소	2020-06-02	2030-06-01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BF 예비인증 현황

등급	시/도	시군구	지역(시설)명	인증일자 <sup>33)</sup>	인증기관	비고
최우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2013-08-14	한국장애인개발원	본인증
우수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2016-02-23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수	경기도	파주시	파주등기소(시법원)청사	2017-08-2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본인증
일반	경기도	수원시	수원가정법원청사	2017-12-26	한국부동산원	본인증
우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광역등기국	2018-12-14	한국부동산원	본인증
우수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청사	2018-12-14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인증
우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청사 신축	2019-02-28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우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방법원 광역등기소 신축 설계용역	2020-04-24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본인증
우수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신축설계	2022-01-14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우수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지방법원 별관 증축공사	2022-07-06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별관 증축공사	2023-09-08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우수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2024-01-24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우수	충청남도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	2016-09-08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인증
우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서부광역등기소	2016-12-16	한국장애인개발원	본인증
우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북부광역등기소	2017-06-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인증
우수	세종특별자치시		등기전산정보센터	2018-04-02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최우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등기소청사	2023-05-23	한국장애인개발원	

- 그러나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는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화장실, 점자블록 등 일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이고, 법원에 특화된 시설기준은 없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접근·이용에 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적용되는 대상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시설물에 한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33) 예비인증 만료일은 본인증 교부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임.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 법률이 정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 및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하며, 이 법의 수범자로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포함됨
-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시설물은 제한적임(법 제2조제3호에 명시)

### 〈공공디자인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골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보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내부 규정

### ■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692호)

-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설비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6. 12. 13. 제정, 2007. 1. 1. 시행(개정된 적 없음)
  - 표준적 지침으로서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예산의 제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관하여는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음

###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효력)

이 예규는 법원청사 등 사법시설의 신·증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설계·시공에 대한 표준적 지침으로써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적용범위)

사법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예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부 또는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였거나 개정된 경우
2. 자재 및 공법 등이 새로이 개발·개량·도입되어 가격, 품질, 성능 등이 이 예규의 기준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예산의 제약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조 (시설기준) 사법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 원칙
  - 나. 사법시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이 정한 편의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40호)

-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의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법원규칙임
- 좌석의 위치를 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인 형사소송의 피고인, 피해자, 증인 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 등으로 출석할 경우의 기준은 없음

#### ■ 청사유지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90호)

- 각급 법원과 등기소의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선비를 절약하고, 청사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규임
-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에 한함

##### <청사유지관리지침>

##### II.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요령

다. 부대시설 점검

- (2) 장애인 등 출입용 경사로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될 경우 휠체어가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눈을 제거하여 결빙상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 3. 물리적 시설접근 보장체계 구축 방안

#### 가. 관련 규정 형식

-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하여 법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준수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설접근성을 보장해야함 ⇨ 법원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내부 기준이 없어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 규정 형식

- (1안) 사법지원예규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 시설접근은 사법지원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사법지원의 조직이 시설접근성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한 규범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2안) 기존 규정(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등)에 추가하는 방안

-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는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법원행정예규로,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접근 규정은 그 목적에 부합함
- 법정에서의 각 참여유형별 좌석의 위치에 대한 규정은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 검토의견 ⇨ 사법지원예규안에 시설접근성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

- 시설접근성은 정보접근성과 함께 사법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법지원 업무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법지원예규안에서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원 내부 여러 규범에 별도로 추가할 경우 시설접근성이 지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각 규범별로 구현하기 어렵고, 관계된 여러 규범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음

### 나. 법원의 특유한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 마련

#### ■ 필요성

-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일반적인 공공청사의 편의시설이 아닌, 법원에 특유하게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 기준이 전무하므로 이러한 기준 수립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특히, 장애인 등의 사법절차 참여를 위해서는 각 절차 참여유형별로 법정 등의 모든 좌석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 법원의 특유한 시설 및 법정 내 주요 시설

- 법원에 대한 물리적 시설접근성은 법원청사 또는 법원 청사 내 주요 공간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법정 등 재판절차 또는 그에 준하는 사법절차가 행해지는 장소 내에서의 접근성 보장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sup>34)</sup>

- 법원청사 내에서 다음의 각 시설 등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설치될 뿐 아니라,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할 필요 있음
  - 법정, 경매법정, 조정실, 민원실, 증인지원실, 면접교섭센터 등(이 중 밑줄 친 부분을 대표적인 예시로 사법지원예규안에 명시함)
- 특히 법정은 장애인 등 사법절차 참여를 위해 더욱 상세하게 접근성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내부 통로, 당사자석, 증인석, 배심원석, 방청석, 판사석, 검사석, 변호사석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필요
- [참고] 현재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수립 방안」 정책연구용역이 입찰절차 진행 중임(2025. 4. ~ 2025. 9. 연구 예정)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설접근을 위해 법원의 중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설계 형태까지 제시하는 연구임 ⇨ 향후 기준 수립에 활용 가능
  -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의견을 반영하여, 법원 설계지침서와 과업지시서에 담을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을 수립할 예정임

#### ■ 노력의무 명시

- 신속·충족 등 불문하고 모든 법원청사의 시설접근성 보장 필요 ⇨ 그러나 구축 법원 등의 경우 예산상 한계 등으로 인해 완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보장한다”가 아닌, “보장하도록 노력한다”의 노력조항으로 명시
  - ⇨ 다만, 필수적 실태조사 실시 등에 의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의 실시

#### ■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주기

34) 미국 법원 접근성 자문위원회가 2006년 발표한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가능한 법원 설계”에서는 ‘접근 가능한 법원설계를 위한 제안’과 ‘접근 가능한 법정설계를 위한 제안’을 구분하고 있음. 입성택 외, 「각급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2021), 243쪽 이하 번역본 참조.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은 시설주관기관(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이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로서 5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동안 국가를 행정부로 제한하여 실태조사에서 사법부를 제외하였으나 사법부도 국가기관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각급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0쪽)

#### <장애인등편의법>

##### 제11조 (실태조사)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각급 법원의 편의시설 사항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는 법원에 특화된 기준이 없음
  - ⇨ 법원이 별도로 정한 시설기준에 따른 실태조사가 더욱 유의미할 수 있음

#### ■ 실태조사의 방법

- 실태조사는 ① 실태조사 전문 외부기관 위탁에 의한 현장 조사, ②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현장방문에 의한 전수조사, ③ 체크리스트 등에 의한 자체조사 등의 방법이 있음
- 실태조사의 방법은 조사 당시 상황과 환경, 조직, 관리·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하도록 구체적 방법까지는 명시하지 아니함

### 라. 기준수립권자

#### ■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

- 구축 법원청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예산의 한계 내에서 가장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필요  
 ⇨ 시설접근성 보장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필요
- [참고]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수립 방안」 정책연구용역은 구축 법원청사에 대한 시설 개선 로드맵을 제안하는 연구과제도 포함하고 있음
  - 시설 개선이 필요한 법원 주요시설을 중요도, 시급성, 보완 필요성을 고려해 1, 2, 3차시설로 분류하고, 최저비용·최고효율의 시설개선방안 및 소요 예산을 함께 제안하도록 함

#### ■ 기준수립권자: 법원행정처장

- 단계적 범위 설정방안은, ①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 ② 별도의 예규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③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단계적 범위는 예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결정 필요 ⇨ 규범 형태가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편의시설의 세부적 기준, 실태조사의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할 필요가 있음
  - 편의시설 관련 세부적 기준 ⇨ 상기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기준 수립 필요
  - 실태조사의 방법 ⇨ 조사시기의 상황, 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할 필요 있음

#### 마. 사법지원예규안

##### ■ 사법지원예규안의 시설접근성 관련 규정(안 제4조)

###### 제4조 (시설 접근성)

- ① 법원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원의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② 법정, 조정실, 민원실, 면접교섭센터 등 법원의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특히 법정에는 법정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법정 내부의 당사자석, 증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석, 방청석, 판사석(법대), 검사석, 변호사석 등의 좌석에 대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 ④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법원 고유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4. 그 밖의 시설접근 보장을 위한 방안

### 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 사업 예산 현황

- 법원청사 관련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사업(일반회계): 251백만원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02백만원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22년 COVID-19의 영향으로 251백만원으로 감액된 후 현재까지 동 금액으로 유지됨
- 등기소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등기특별회계): 275백만원
  - 2013년부터 현재까지 275백만원으로 유지됨

#### ■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필요

- 2026년 예산에 다음과 같이 증액요구 예정(2025-2029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일반회계)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확충: 502백만원(중 251백만원)
  - (등기특별회계)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확충: 550백만원(중 275백만원)
- 법령상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보완 필요사항

구분	상세 내역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 및 노약자 호출벨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경사로 및 핸드레일 등



구분	상세 내역
위생시설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출입을 위한 입출구 개선, 세면대 개선 등
안내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및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
기타시설	장애인용 문서접수대 등

- 위 증액 요청은 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10개 법원의 시설 개선 공사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그러나 사법지원예규안의 시설접근성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법원에 특유한 시설 및 법정에서의 최대한의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함  
⇒ 향후 구체적 시설기준 수립과 함께 예산 증액 상향을 위해 노력 필요

- [참고]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수립 방안」 정책연구용역은 구축 법원의 시설개선 로드맵과 함께 소요 예산 예측을 연구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나. 법원 웹사이트에서의 시설물 접근성 안내

### ■ 제안 취지

- 기일통지서, 소환장 등에 의한 법정 관련 정보만으로는 시설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이 접근경로와 접근방법을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주출입구, 휠체어 등의 이동경로와 접근방법, 장애인 화장실, 해당 법정으로의 이동 경로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를 각급 법원 웹사이트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참고] 미국은 각 법원 웹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라도 법원 건물의 접근성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 (예) 뉴욕주 법원의 홈페이지 안내(보조청취시스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등)

(이하 사진을 위한 여백)

**COURT ADDRESS:** 111 Centre Street, New York, NY 10013


**ASSISTIVE LISTENING SYSTEMS:** Available in all courtrooms.

**ELEVATORS:** Available on all public floors.

**RESTROOMS:** Available on all floors except the lobby (1st Floor).

**PARKING:** No parking on-site or adjacent to the facility. Public parking garages are nearby for a fee.

**ADA ENTRANCE(S):** Main Entrance - Enter at street-level with the assistance of uniformed personnel.



## Ⅶ. 사법접근센터의 사법접근·사법지원 총괄센터로의 기능 전환

### 1. 현행 사법접근센터의 문제점

#### ■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 설치 현황(2025. 3. 2. 기준)

- 우선지원창구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4개 법원에 설치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사법접근센터는 2019년 수원법원 및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9개 법원에 설치됨
- 연도별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설치 법원 현황

연도	사법접근센터 설치 법원	우선지원창구 설치 법원	누계 (법원/창구)
2014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2)	2/2
2015		서울중앙지법(창구2개), 부산지법(2)	4/5
2016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울산지법(3)	7/8
2017		대전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2)	9/10
2018		서울가정·행정법원 종합청사, 서울회생법원,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서부지원(4)	13/14
2019	수원법원종합청사, 전주지법(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광주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광주가정법원(6)	21/22
2020	창주지법(1)	인천가정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5)	27/28
2021	★울산지법(1)	대전가정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6)	33/34
2022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2)	대구가정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춘천지법 속초지원(3)	37/38
2023	★서울동부지법, ★광주지법(2)	의정부지법, 수원회생법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주지법 군산지원(4)	41/42
2024	★대전지법(1)	대전지법 홍성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2)	43/44
합계	9(전환5)	34	43/44

※ ★는 우선지원창구에서 사법접근센터로 전환 설치한 법원임  
(전환 전 우선지원창구는 우선지원창구 현황에서는 열은 글씨로 표시함)

## ■ 사법접근센터의 최초 기획과의 달라진 운영방식

- 국민의 사법접근 제고를 위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sup>35)</sup> ⇨ **(최초 기획) 각종 분쟁 해결 지원 및 통합적 사법서비스(각종 서류 작성·제출 등 포함) 제공 센터**
- **(실제 운영) 각종 상담창구가 병렬 배치된 공간에 그침**
  - 서류 작성, 접수, 발급 등 서비스 미제공 ⇨ 현실적으로 상담위원과 민원실 간 연계·협력이 어렵고, 대필 등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사회적 약자의 이용률 저조

- 사회적 약자 이용률은 고령자 포함 20% 정도에 불과함

35) <2018. 9. 4.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 중 관련 내용 발췌

2.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외국인·이주민 등도 사법서비스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하 생략)

- ‘사법접근센터’ 명칭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센터로 인식되기 어렵고, 정보접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센터 정보를 인지·방문하기 어려움

## ■ 유관기관 상담 이용률 저조

- 사법접근센터의 통합적·집중적 분쟁해결 기능의 핵심은 유관기관의 각종 분쟁(세무·노무·자산관리·가정폭력 문제 등)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것임
- 그러나 여러 유관기관이 돌아가며 특정 요일 2시간씩 상주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통합적·집중적인 분쟁해결을 제공할 수 없음
- 유관기관 상담은 법률상담, 민원상담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참고]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창구별 이용률(2022년 1/4 ~ 3/4분기)<sup>36)</sup>

상담 유형	법률상담/민원상담			유관기관상담			
	변호사회	법무사회	민원상담	가정폭력 상담소	신용회복 위원회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	세무사회
연간 (비율)	375 (15.8%)	140 (5.9%)	1832 (77.1%)	13 (0.54%)	1 (0.04%)	10 (0.42%)	5 (0.2%)

- 유관기관 상담 저조는 다음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법원 방문자는 법률분쟁 해결 외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재판 등으로 법원에 온 때에 필요한 유관기관 직원이 상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사회적 약자가 ① 자신이 필요한 유관기관을 선별·선택, ② 센터에 대한 정보 취득, ③ 방문 또는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 상담하는 것은 쉽지 않음

## ■ 사법지원관의 역할의 모호함 및 상담위원의 전문성 부족<sup>37)</sup>

- 현재 사법접근센터에 법원사무관을 사법지원관으로 배치하는데, 그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법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 이에 일부 센터에서는 사법지원관이 단순히 민원상담관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사법접근센터 운영에 핵심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36) 2022년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에서 전주지방법원 사법지원관이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함.

37) 2020년 6~8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소속 직원들의 전국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를 방문점검 및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례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사법지원관,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을 직접 대면하여 청취한 내용임.

-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은 법무사 자격이 있으나 법무사로 개업하지 않은 사람을 배치함 ⇨ 법적 지식과 소명의식은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성은 없으며, 장애인 등 방문빈도가 적어 경험적으로 체득하기도 어려움

## 2. 사법접근센터의 기능 전환 방안

### 가. 법원의 사법접근·사법지원을 총괄하는 센터로의 전환

#### ■ 전환 필요성

- 사법접근은 시설접근·정보접근 및 각종 사법절차와 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함  
⇨ 사법접근과 사법지원 실무는 분리하기 어렵고, 연계하여 제공함이 바람직함
- 보다 현실적 이유로, 각급 법원에 사법지원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증원·전담인력 배치는 직제협의를 요하는 과제임 ⇨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법접근센터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사법지원 전담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음

#### ■ 사법접근센터 사법지원관 ⇨ 사법지원책임관으로 승격함

- 사법접근센터의 사법지원책임관(기존 사법지원관) ⇨ 사법지원의 총책임자
  - 각급 법원의 시설접근·정보접근·교육·사법지원 등을 총괄하는 사법지원책임관을 사법접근센터의 사법지원책임관이 담당하도록 함
  - 사법접근센터 업무에 사법지원(사법지원예규안 제7조제2항)를 포함시킴

1. 사법절차와 서비스에서의 사법지원 업무
2. 제1호에 관하여 재판부, 각 과·실의 요청에 따른 지원 및 사법지원 대상자와의 연락, 소통
3. 수어통역인 후보자 등 사법지원 인력 및 각종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관리·운영
4.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
5. 소속 기관 내 사법지원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제도·정책 홍보
6. 사법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소통, 협력
7. 사법지원 통계취합 등 사법지원 업무 관리
8. 그 밖에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관련 제도·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사법접근센터 ⇨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의 허브
  - 장애인 등의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 관련 재판절차 외 지원은 물론, 재판부

요청에 따른 재판절차 내에서의 지원까지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사법부 구성원과 국민 모두에게 확실한 문의처이자 지원센터로 기능할 수 있음

- 사법접근센터에서 각급 법원의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등 편의제공 수단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현재 관리부서가 부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 사법지원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법지원관을 둘 수 있게 함

- 현재 사법접근센터 사법지원관은 단독으로 그 업무를 지원하지만, 사법지원책임관으로 승격하여 사법지원 업무까지 담당하는 이상 그 업무를 보좌할 사법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해당 법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다수의 사법지원관이 지정되는 경우 사법접근책임관은 소속 기관 내 사법지원관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음

### 나.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를 ‘사회적 약자’로 칭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 제공 ⇨ 이들은 의사소통, 정보접근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우선적 상담보다 강화된 특별한 지원 필요
- 다만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은 구조적으로 이들을 약자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신 ‘우선지원대상자’라고 지칭함

#### ■ 모든 상담창구에서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 모든 상담창구에서 우선지원대상자에게 최적의 사법지원 제공 필요
- 모든 상담위원·민원상담관의 전문성을 강화함
  -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책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지원책임관이 상담위원·민원상담관을 교육·훈련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함
- 모든 상담창구에 보조기구 비치 확대
  - 보조기구는 통상 센터 내 한 곳에 비치되어 있으나, 정보접근 또는 의사소통

을 위한 보조기구(돋보기안경 또는 확대경, 음성증폭기나 보청기, 통역서비스를 위한 PC나 화상전화기 또는 모바일기기)는 창구별로 구비하도록 함

#### ■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우선지원대상자는 정보접근에 취약해 문제의 원인, 해결방법, 문의처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 이해할 가능성이 낮음 ⇒ 사법지원책임관, 민원상담위원 등이 우선지원대상자의 문제 파악 및 상담창구, 부서 등으로 연결 필요
- 유관기관 협력방식을 비상주로 전환 ⇒ 문제해결 지원 강화 가능
  - ① 비상주 유관기관 확대 및 유관기관 리스트를 민원상담위원 등에게 공유
    - 출장 상주 방식이 아니므로, 유관기관 수에 제한이 없어 협력기관 확대 가능
    - 비상주 방식이므로 센터 방문 당시 창구에 없는 유관기관에 협력 요청 가능
  - ② 상담위원이 상담 중 문제 인식 ⇒ 관련 유관기관의 연락·내담자 연결
  - ③ 유관기관 상담(기관 및 내담자 여건에 따라 화상/유관기관 방문/법원출장 可)

### 3. 사법접근센터 기능전환의 효과

효 과	기능전환 전	기능전환 후
우선지원대상자 : 사법접근센터 이용이 쉽고 유용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구에서 우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창구에 보조 기구가 없거나, 상담위원이 자신과 소통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창구에서 우선적인 상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창구에서 상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음, 홈페이지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유관기관이 뭘 하는 곳인지도 모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창구에서라도 상담을 받으면 나한테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주고, 관련된 유관기관을 연결시켜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세무, 노무, 자산관리 등 몇 개 기관으로 한정되고, 그마저도 지정된 날짜, 시간에 맞추어 방문해야 상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협력 유관기관이 있음. 유관기관은 비대면 영상상담도 되고, 기관에 방문할 수도 있고, 다음 번 법원에 오는 날짜에 맞춰 상담을 예약할 수도 있음</li> </ul>

효 과	기능전환 전	기능전환 후
각급법원 재판부: 사법지원 업무 관련 조력을 받고, 업무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재판절차에 참여한 경우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사법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하면, 사법접근센터에서 직접 그 대상자를 면담하고 필요한 사법지원사항을 확인해 신청서까지 작성해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지원 신청이 들어왔지만, 해당 보조기구가 있는지 및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접근센터에 연락하면, 법원에서 가능한 사법지원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 보조기구를 가져다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절차에서 사법지원을 제공하기 까다로운 사안인 경우 참여사무관 등이 사법지원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접근센터에 문의하면, 사법지원책임관 등이 그 대상자 등과 소통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법지원 사항을 세팅해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지원이 재판부별로 각각 제공되어, 그 사례를 수집하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사례 작성하기에는 업무상 부담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지원책임관이 일괄하여 사법지원 사례를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수집하여 실제 사례에 기반한 사법지원 방안 마련 가능</li> </ul>

### 4.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안

#### ■ 예규 제정의 필요성

- 사법접근센터는 2020년부터 우선지원창구를 통합하여 00개 법원에 설치되어 왔고 그 설치 법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위 내용을 반영한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이하 ‘사법접근센터예규안’) 제정 필요

#### ■ 사법접근센터예규안

- ※ 아래 예규안은 장애인등사법지원연구반의 연구를 거쳐 마련한 예규 초안을 실무지원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일부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향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규 제정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가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사법접근 및 그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 ① 각급 법원은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사법접근센터를 둔다. 다만, 여러 개의 법원이 통합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사에 한 개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법접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접근성 보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상담, 법률상담, 유관기관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
2.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법접근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우선지원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이하 “우선지원창구”라 한다)
3. 안내데스크(근접한 위치에 있는 종합민원실 또는 주출입구의 안내데스크와 결합할 수 있다.)
4. 낮낮이 조절이 가능한 서식작성대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사건검색용 컴퓨터
5. 민원인 대기공간

- ③ 이 조의 단계적 설치 범위 및 구체적 기준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 (업무)

사법접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및 사법정보의 제공
3. 사법절차 외 사법접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의 제공
4. 민원상담, 법률상담, 유관기관상담 등 각종 상담창구 운영 및 상담위원의 관리
5.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법원 내 업무 안내 및 소관부서 연결
6. 상담, 통역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력
7. 그 밖에 법원 이용자의 사법접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 (조직)

- ① 사법접근센터에 센터의 업무를 총괄, 관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법지원책임관 1명을 둔다.
- ② 전항의 사법지원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법지원관을 1명 이상 지정,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사법지원관의 지정, 위촉,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 ③ 사법접근센터에서 민원인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직 법원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 (사법지원책임관)

- ① 사법지원책임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등기)사무관으로 하고, 장애의 유형이나 특성,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등 사법접근센터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 ② 사법지원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법접근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실무
2. 사법접근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관련 통계 취합·관리
3. 우선지원대상자의 사법접근센터 이용 안내 및 상담창구, 외부기관과의 연결 등 지원
4. 우선지원대상자의 사법접근을 위한 지원 및 이에 대한 상담위원 등의 교육·훈련
5. 사법접근센터 홍보 및 개선사항 발굴 등 그 밖에 사법접근센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 (상담위원)

-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사법접근센터에 제4조제3항의 민원상담관에 더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률적 분쟁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
2. 법률적 분쟁 외의 각종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외부기관의 소속 직원
3. 우선지원대상자 관련 단체 소속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4. 조정위원 등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기타 사법접근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법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상담은 해당 단체, 외부기관 및 상담위원과의 협의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 또는 비대면 영상상담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이 조에 따른 상담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 범위는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정한다. 다만, 업무협약에서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 제7조(상담창구)

- ① 사법접근센터의 상담창구별 운영시간 및 상담 예약방법 등을 해당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된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사법접근센터 내 모든 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신청서, 가이드라인 및 각종 관련 자료
2. 돋보기안경 또는 확대경 등 물체를 확대하는 수단
3. 휴대용 음성증폭기, 보청기, 난청자용 헤드셋 등 소리를 증폭해주는 수단
4. 화상전화기, PC, 태블릿, 모바일기기 등 수어통역, 외국어통역 등을 지원해주는 수단
5. 상담위원이 위급할 때 보안관리대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 등

- ③ 우선지원창구와 민원상담창구의 민원상담위원에게는 사건검색이 가능한 내부망 계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 (상담일지)



① 사법접근센터 내 상담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 대하여는 상담일지를 작성하되,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 등 내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③ 사법지원책임관은 매월 전월의 상담일지를 취합·관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담일지의 사본 또는 그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사법지원책임관, 사법지원관, 민원상담관 및 상담위원은 사법접근센터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민원처리)

사법접근센터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1항제2호의 고충민원으로 본다.

#### 제11조(직무교육)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지원책임관과 사법지원관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자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우선지원대상자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원상담관 및 상담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이 조에 따른 사법지원관과 민원상담관 및 상담위원의 교육을 사법지원책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임사항)** 이 예규에 정한 사항 외에 사법접근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 VIII. 공소장 등 장애정보 표기 방안

###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6항의 의무 이행

-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사법지원을 안내하며, 그가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형사절차 초기에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지원 어려움

-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를 확인하기 어려움 ⇨ 1회 기일에 사법지원 제공 어려움

#### ■ 장애인 전문재판부 운영 등에 의한 실질적 필요성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재판부(합의 2개, 단독 2개)를 운영하고 있음 ⇨ 그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음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법 제2조) 및 그에 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① 피고인, ② 피해자 증인이 있는 사건(단순 지체장애, 시청각장애는 제외)
    - 다만, 자백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그러나 배당 시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각 재판부로 배당 후 전문재판부로 재배당됨 ⇨ 절차 지연 및 전문재판부 운영의 실효성 저하 야기
  - 재배당 시 재배당 절차, 기존 재판부 국선번호인 지정취소 및 재배당 이후 국선번호인 지정결정, 공판갱신절차 등으로 상당한 절차적 지연 초래
  -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1회 기일을 진행하면서 자백사건,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 사건 등은 재배당 없이 종결하고 있어 전문재판부의 실효성이 저하됨

#### ■ 대검찰청의 의견

- 대검찰청에서도 연구반에 참여하여, 수사단계에서 파악한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공소장 접수 시부터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2.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 ■ 검토 배경

- 장애 정보가 포함된 공소장을 제출받음으로써 법원이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생기게 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만약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면 장애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 없음

#### ■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 공소사실의 존재에 관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내용뿐 아니라 정상에 관해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도 허용되지 않음.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제1항 기재서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sup>38)</sup>

##### <형사소송법>

#####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 <형사소송규칙>

#####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음<sup>39)</sup>

38) 노태악 편, 주석 형사소송법(Ⅱ)(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792-796.

39)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 피고인의 장애 정보 표기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 ① 공소장에 피고인의 장애를 표기한다고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공소사실의 실체 내지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② 범죄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의 절차상 조력을 위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정상에 관하여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기소 당시 장애가 범죄 당시 장애를 추단케 하여 정상이나 양형에 영향을 주더라도 범죄의 죄책과 인과관계가 너무 멀어서 ‘사건에 관하여’에 해당하지 않음
- ③ 공소장일본주의가 공소제기 단계의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 등에 따른 한계가 있음<sup>40)</sup>  
⇨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개념임
- 따라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장애를 표시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장애정보 표시의 구체적 방안 및 표시할 장애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을 유념할 필요는 있음

### 3. 구체적 방안

#### 가. 장애정보 표기: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 [별지4-1] 첨부

##### ■ 공소장에 장애 관련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에 의함

- 다음을 이유로 공소장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은 택하기 어려움
  - 장애 정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공소장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40)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형사소송규칙>

제117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 ①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공소장은 피해자의 열람·등사신청에 따라 재판부 외의 제3자에게도 공개될 수 있으므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공소장에 별도로서류로 첨부하는 방식은 예단이 생기게 하는 서류가 아니라면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제1항에 열거한 서류 외에도 첨부 가능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또한 공소장의 별첨 서류로,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첨부서류를 제외한 공소장의 열람·등사를 허가함으로써 이를 제외할 수 있음

- 이미 외국인 피의자 국어 사용여부 조사보고서[별지4-2] 첨부 사례가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적 지원의 취지로 공소장에 첨부되는 별첨 보고서임
  - 2004. 11. 대검찰청이 관련 규정 없이 ‘외국인 기소시 통역인 기제에 관한 지시’ 공문을 각급 검찰청에 보내어 시행함(대검찰청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 나. 표시 사항: 의사소통 관련 장애 여부 및 조력 여부

### ▣ 표시 대상 장애: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한정함

- 표시 대상은 다음을 이유로 의사소통 관련 장애에 한정하였음
  -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6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장애 여부 확인 및 구체적인 조력 대상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규정함
  - ②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대면하지 않는 사건이 많은데, 이 경우 기소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피의자의 신체장애 등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 ③ 2025. 1. 재판양식을 개정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에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를 추가하였으므로, 나머지 장애유형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를 통해 장애 여부를 법원에 알릴 수 있음
- 다만, 제도 시행 이후 경찰 등과도 협의된다면, 점진적으로 표시 대상 장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표시될 장애 유형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등까지 포함될 것임
- 또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로서 정보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검찰청과의 협의에 따라 시각장애까지도 포함 가능

### ▣ 기타 표시사항: 수사단계에서의 의사소통 조력에 관한 정보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사법지원 정보가 기재된다면, 공판절차에서 지원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조사 당시 수어통역인 참여 여부 및 수어통역인의 인적사항,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및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관계 등을 기재 시 공판절차에서 수어통역인 지정, 신뢰관계인 동석 허가에 참고 가능

## 4. 시행 시기 등

### ■ 대검찰청과의 협의에 따라 시행 가능

-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의 협의만 되면 신속하게 시행 가능하고, 위 ‘외국인 피의자 국어 사용여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 없음
- 대검찰청도 연구반원을 통해 장애 여부 확인 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 ■ [보론] 형사소송규칙 개정

-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118조를 개정하여 관련 보고서를 공소장 첨부서류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IX. 피고인(피의자) 진술조력 방안

### 1. 검토의 필요성

#### 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의 필요성

#####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등의 의사소통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의 필요성

- 진술조력은 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의 진술을 돕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피해자, 피고인(피의자를 포함하며, 이하에서 통칭하여 ‘피고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것임
-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 및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 못지않게 피고인 등과의 정확한 의사소통 및 이를 위한 조력 필요

##### ■ 헌법, 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의 실현

-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한 피고인 등에게 진술조력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는 증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가 없는 피고인 등과 차별하는 것임

-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을 조력할 의무 있음
- 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력을 보장하는 것은 협약에 규정한 사법에 대한 접근권(제13조)을 실현하는 주요한 방법임 ⇨ 우리 진술조력제도의 모델인 영국에서도 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력을 제공하고 있음

##### ■ 보조인·신뢰관계인을 넘어 진술조력인에 의한 지원 필요성

-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등을 위해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 심리적 안정 제공 및 의사소통을 보조만 가능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중개·조력할 수 없고, 이들을 통해 피고인 등의 진술이 오염될 우려도 있음

#### 나. 피고인 등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관련 난점

##### ■ 피고인 등 진술조력인 도입에 대하여 다음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① 진술조력인 제도는 중립적 지위를 지키면서도 피해자와 라포(Rapport) 형성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해 최대한 피해 관련 진술을 원활히 끌어내기 위한 피해자지원 제도로서 이를 피고인 등에게 확대하는 것이 제도상 적절치 않음
- ②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달리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조사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전제되지 않는 진술조력인 지원은 장애인인 피고인 등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 초래 가능
- ③ 이로 인해 자칫 진술조력인의 조력이 장애가 있는 피고인 등의 자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 법무부, 대검찰청은 상기한 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의자 국선변호인(형사공공변호인제도)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러한 문제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으나 후술하는 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제도설계에서 고려할 필요 있음

## 다. 검토 방향

### ▣ 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 시범실시를 전제로 검토함

-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력이 필요하며, 국선변호인 등의 조력이 가능하여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없음 ⇨ 피의자를 제외하고, 피고인 진술조력을 먼저 도입 가능하다는 전제로 검토함

### ▣ 피고인 등 외 모든 절차참여인을 위한 진술조력 방안 검토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중개와 보조는 사건관계인의 지위나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증인의 경우에도 같은 진술조력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력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참여인 (모든 피해자 및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증인 포함)에게 진술조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함

## 2.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현황

### 가. 개관

#### ▣ 의의 및 연혁

-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가 양성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로, 영국 등록증개인 제도를 모델로 함
- 형사사법절차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로,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

(2013. 6. 19.) 13세미만,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성폭력처벌법 제35-39조)
(2020. 10. 1.) 아동학대 사건의 참고인, 증인에 대한 진술조력(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제2항)
(2021. 6. 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2022. 1. 28.)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2023. 1. 1.)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3. 10. 12.)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성폭력처벌법 제36조)

### ▣ 진술조력인 자격 및 역할<sup>41)</sup>

#### ● 진술조력인 자격

-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성폭력처벌법 제35조 제2항)
- 자격부여 절차: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신청 ⇒ 교육대상자 선별(서류심사·면접) ⇒ 교육 이수 ⇒ 진술조력인 자문단 심의 ⇒ 법무부장관의 자격 부여

#### ● 진술조력인의 의무 및 역할

-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진술을 왜곡 없이 전달해야 할 중립의무(성폭력처벌법 제38조제1항)와 비밀준수의무(동법 제38조제2항)가 있음
- 사전면담 ⇨ 의견제출(구두·서면)
  - 단 피해사실이나 사건내용에 대한 면담은 금지됨
  - 의견 범위: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심리적 특수성, 의사소통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
- 조사·공판절차 참여 ⇨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가능
  - 피해자 진술에 개입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등이 피해자 진술을 직접 청취한 경

41)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하 성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살펴봄.



우에만 피해자 진술에 대해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음

- 중개·보조의 역할로서, ①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 변환·전달, ② 수사기관·법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인지기능, 진술능력, 심리상태 등 설명, ③ 의사소통 방법, 보조수단 등에 대한 논의·조언, ④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수행 가능
- 특히 공판단계에서는, 신문과 증인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요지 설명 및 검사, 변호사 등에 대한 신문 취지 질문, 신문사항 수정 요청, ②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 ③ 진술조력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답변 가능

## 나. 진술조력인 현황

### ■ 진술조력인 수

- 2013. 12.경 48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한 이래 매년 10~15명 정도 양성 → 2024. 하반기 기준 151명(상근 진술조력인 21명, 비상근 진술조력인 130명)

### ■ 예산 및 진술조력 현황

- 2024년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배치 사업 예산은 13억 6천만 원임
- 범죄피해자 유형별 진술조력 건수는 다음과 같음

연도	진술조력 건수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대상	인신매매등
2014	386	356	30	-	
2015	727	417	310	-	
2016	1203	641	562	-	
2017	1381	735	646	-	
2018	1722	1003	719	-	
2019	2226	1207	1019	-	
2020	2684	1454	1230	-	
2021	4184	1600	2584	-	
2022	3822	1678	2107	37	
2023	4231	1963	2198	64	6
총계	22566	11054	11405	101	6

## 3.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진술조력 제도 도입방안

### 가. 사건관계인을 위한 진술조력 제도 도입방안

#### ■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에게 진술조력을 제공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 (1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조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 ☒ 법무부가 10년 이상 운영해 온 진술조력인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인력을 양성·검증하는 등의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음
- ☒ 공판절차와 수사절차 모두에서 일관된 진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
- ☐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의 개편 등이 필요하며,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 ☐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보장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의자 국선변호인(형사공공변호사) 제도와 병행 필요(법무부·대검찰청 의견)

##### ● (2안) 별도의 공판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조력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6항을 이행하고, 사법지원 신청에 따라 의사소통보조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절차에서 활용가능한 인력 양성 가능
- ☒ 법률개정, 법무부 협의 등 절차 불요(다만, 관련 예산 확보는 필요함)
- ☐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의 범위가 달라짐으로 인해 피고인 등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
- ☐ 법률상 명시된 진술조력인보다 조력 범위가 협소함

#### ■ 검토의견: 1안과 2안의 병행 추진

- 법원은 장애인 등의 사법지원 신청에 따라 장애인 등이 요구하는 경우 의사소통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소통보조인력 구축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6항은 특별히 형사절차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력은 사법절차 참여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모든 절차에서 조력 필요
- 현재 형사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면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의 공익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개선 필요

- 이에 법원은 모든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보조인력을 갖추되, 법률상 적극적인 의사소통 중개·보조가 가능한 진술조력인 조력 대상 확대 추진 필요

## 나. 진술조력인 조력 대상 확대 방안

### ■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사항

- 조력 대상이 피해자인지, 피고인 등인지에 따라 진술조력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현행과 같이 법무부가 진술조력인을 통합 운영하면 되고, 양성교육의 내용이 추가되는 외에 별다른 제도 설계·구축이 불필요함
- 따라서 진술조력인 조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방법, 즉 확대의 방식을 확정하는 것임

### ■ 제도 도입 ⇒ 법률 개정

- 의사소통 조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 없이 도입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참고인,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중개·보조의 방식으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현행 진술조력인의 조력대상은 법률로 명시하고 있음<sup>42)</sup>
- 법률규정 없이 진술조력인이 조력하게 할 경우 그 진술을 반박하려는 사건관계인(검사,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사건관계인 전반에 대해 진술조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인력 확대, 수당지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법률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인력 보강, 예산 증액 등 제반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음

42) 성폭력처벌법 제35조 내지 제3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입안 방식 ⇒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인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신설함**

- 피고인 등과 참고인, 증인에 대한 진술조력의 근거를 어느 법률에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로서, 다음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1안) 장애인 관련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
  - 증인,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발달장애인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sup>43)</sup>
  -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던 진술조력을 확대함으로써 손쉽게 개정 가능하나, 유관기관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조 필요
- (2안) 진술조력인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 진술조력인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면 제도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고 제도의 전체적인 개관이 쉬우며 법률 개정도 용이함
  - 신뢰관계인, 증인지원관, 보조인 등도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술조력인만 별도 법률로 제정 시 유사한 법률의 난립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 있음
- (3안)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 형사소송법 각 장에 진술조력인 규정을 신설해야 하므로 입법 난이도가 높음
  - 반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건관계인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비하여 간이하게 법률 개정이 가능함
  - 또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보편적 제도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도 향상할 수 있음<sup>44)</sup>
- 검토의견: (3안)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43)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진술조력인이 지원하게 하자는 취지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의안번호 2019584), 21대 국회(의안번호 2103077)에 각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44) 피고인 등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670)이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진술조력인 제도의 일관적 운영과 국민의 제도 인지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함
- 진술조력인 및 그 밖의 제도(신뢰관계인, 보조인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인지·활용할 수 있고, 이로써 각각의 제도에 대한 체계적 운영 가능

## 다.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1) 관련 법률의 정비

#### ▣ 형사소송법에 통합적 규정을 마련할 경우 다음 법령의 정비 필요

- 성폭력처벌법의 진술조력인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준용한 관련 법률에서 형사소송법에 신설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거나 삭제 필요
- 현재 재판절차에서의 진술조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 내지 25조를 삭제하고 진술조력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 2) 형사소송법 개정안

#### ▣ 조문 위치

-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 ⇨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인 제244조의5와 제276조의2 뒤에 위치시킴

#### ▣ 주요 내용

-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조력인 양성,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참여, 진술조력인의 의무, 벌칙조항만을 명시하고,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제35조의2),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제35조의3)는 하위규범으로 위임함
- [참고] 신뢰관계인 동석, 보조인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진술조력 대상

#### -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진술조력 대상 설정의 문제점

- 성폭력처벌법은 진술조력 대상을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규정함
- 그러나 진술조력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19세 미만의 피해자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능력의 감소를 요구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함
- 따라서 조력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진술조력 대상<sup>45)</sup>을 기초로 하되 아동 및 고령자를 포섭하여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규정함

#### ● 벌칙규정: 전문심리위원회 준하여 하향 조정<sup>46)</sup>

#### ● 조력대상자의 의사 고려조항: 유지

- 당초 장애인등사법지원연구반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의 삭제를 제안하였으나, 다음을 이유로 유지함
- 진술조력에 대한 조력대상자의 의사 및 진술조력인과의 관계가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조력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조력인 선정 시 피해자 진술의 왜곡·오염 등 실제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
- 진술조력 강요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가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신뢰관계인 동석에도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고 있음(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

#### ▣ 형사소송법 개정안 (예시)

4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대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46)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전문심리위원회의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여 조정함.

#### 제244조의6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 연령 그 밖에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을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문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을 신문 또는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은 신문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을 면담하여 진술조력인의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자신이 조력한 사람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중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이 조에 의한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이 양성한다. 그 밖의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및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44조의7 (진술조력인의 의무)

-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4조의8 (준용규정)** 진술조력인 또는 진술조력인이었던 자가 제276조의4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의9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6조의3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① 법원은 장애, 연령 그 밖에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고인, 증인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제244조의6 제6항에 의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피고인, 증인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의 진술조력인의 공판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76조의4 (준용규정)

제244조의7 내지 제244조의9는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피해자 및 참고인”은 “증인”으로, “수사 과정”은 “재판 과정”으로 본다.

### 3) 진술조력인의 재판절차 참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 주요 내용

##### ● 진술조력인의 참여대상 범위(안 제2조)

-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 선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여대상을 명시함

##### ●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정배제(안 제5조)

-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상담 등 별도의 본업이 있어, 진술조력인 선정 이전 사건관계인을 상담·치료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건을 지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피고인, 증인의 재판절차 참여 전에 사건에 관여한 진술조력인’을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에서 제외·선정 취소하도록 함
- 다만, 대검찰청은 진술조력인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를 탐지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피·회피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 공판절차에서의 사전면담 및 의견제출(안 제8조, 제10조)

-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이 사전면담, 의견제출(진술조력인선정규칙 제20, 제21조)에 상응하는 공판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 ⇨ 공판절차에서 신문 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력대상자 면담**이 필요할 수 있어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한편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 의견서는 증거조사 전에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공판(준비)단계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절차 참여 후에도 진술조력인이 파악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 등에 관한 규칙」(안) 예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 등에 관한 규칙〉(가칭)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대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장애, 연령 그 밖에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 증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재판장이 판단하는 사람

## 제2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 제2조 (진술조력인의 신청권 고지)

- ① 법원은 피고인,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여 피고인, 증인, 그들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제1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증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변호인 및 보조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 ①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제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 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문에 참여하여 증대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고인, 증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5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증인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증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또는 변호인
4. 증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5. 피고인, 증인의 수사과정 참여 전에 사건에 관여한 진술조력인

### 제6조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고인, 증인,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재판절차 참여 등

### 제7조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 ① 법원은 제4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참여하여 증대·보조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증대·보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8조 (진술조력인의 증대·보조권 협의)

-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피고인,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신문의 방식
  2. 피고인,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3.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피고인,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개·보조에 필요한 사항
-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은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 전에 피고인, 증인을 면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협의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증인을 면담하는 경우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진술조력인은 제2항에 따른 면담 당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법원이 요청한 내용

#### 제9조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

- ① 진술조력인은 피고인,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진술조력인은 피고인,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 ④ 진술조력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피고인,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⑦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9조 (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고인,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판 참여 후 의견 제출)

- ①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판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고인,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진술조력인이 전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고인, 증인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 ① 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④ 진술조력인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소정액 이내로 한다.
- ⑤ 진술조력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정한 그 밖의 사람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 ⑥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 4. 정책 결정 시 향후 계획

















▣ 진술조력인의 조력 범위를 피고인 등에게로 확대할 수 있는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이와 별도로 법원 내 의사소통조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함

#### ● ① 정신적 장애인 등이 제출할 수 있는 의견서 양식 개발

- 사법지원예규안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정신적 장애인이나 그의 보호자, 변호인 등은 자신의 진술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정신적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그의 진술상 특성이나 고려할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음 ⇒ 재판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법원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형화한 의견서 양식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이는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패스포트(의사소통 여권)에서 착안한 것으로, 발달 장애인 등이 그의 특성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알리게 하고, 이로써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커뮤니케이션 패스포트(예시)

 I am Guy	 I am 5	 I go to Green Nursery	 My twin brother Gregor goes there too
 I like	 cars	 biscuits	 playing
 I don't like	 sitting still	 lots of people near me	 lots of noise
 I need	 help with my drink !!!	 symbols and signs to help me understand & talk	 you to stop me running away !!!

● ② 전문심리위원회에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추가

- 비상근진술조력인(진술조력인 151명 중 130명이 해당)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진술조력하게 할 수 있음

- 정신적 장애인의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 /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서면 제출
- 재판절차에서 정신적 장애인 진술의 의미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때에 전문심리위원회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장애인에게 그 진술의 명확한 의미를 질문하거나, 그 의미를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향후 전문심리위원회에 의한 조력이 증가한다면, 의사소통조력 상근인력으로 채용 검토 가능(사법정책연구원 김동현 연구위원 의견)

## X. 전문위원 제2연구반 논의경과

### 1. 일시 및 장소

■ 2025. 3. 24. 16:00~17:50

■ 대법원 본관 513호 회의실

### 2. 회의 요지

■ ① 사법지원예규안과 사법접근센터예규안의 제정 필요성

- 장애인 등을 위하여 현재 사법부에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구성원 및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활용률이 높지 않음. 사법지원 제도와 사법접근센터의 기능에 대한 내외부의 인지도를 높이고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사법지원(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현재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규율할 체계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는 데 연구반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 사법지원예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일반을 규율하는 규범이고, 사법접근센터예규는 사법지원을 총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관련 사무를 집행하는 기구인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각각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 ② 사법지원예규안과 사법접근센터예규안의 내용의 적정성

- 사법지원예규안은 총칙(목적, 적용범위, 사법지원 원칙), 접근성(시설, 정보, 보조기구), 조직 및 역할, 교육, 절차, 장애유형별 지원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예규만 보아도 사법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알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고, 예규 규정대로 조직이 구축되고 필수적으로 교육이 시행되면 구성원의 제도 인지도가 매우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예규 제4조(시설 접근성), 제5조(정보 접근성) 등에서 ‘~하도록 노력한다’ 고 규정된 부분이 적절한지 논의하였으나, 기존에 건축된 건물이나 사법부의 예산·인력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부분 규정 방식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음
- 사법지원예규는 제2조 제2항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부상·질병, 임신·출산, 연령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장애인 등’ )” 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사법접근센터예규는 제2조 제2항에서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법접근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우선지원대상자’ )” 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양자 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논의 결과, ①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법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법지원제도와 장애인 외에도 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등(이하 ‘외국인 등’)까지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법접근센터의 기능은 제도의 목적, 규율 대상,

방법 등이 상이하고,

- ② 외국인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있는 장애인 등과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도 언어와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제공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 ③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는 2014년경부터 설치되어 외국인 등을 포함한 우선지원대상자에게 편의제공을 해 왔으므로,
- 각 예규 상의 사법지원 대상에 차이가 생기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다만 사법지원·편의제공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각 예규에 그 내용과 차이점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 ③ 각급 법원의 사법지원 업무를 관리할 책임자로서 사법지원책임관을 총무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총무과장이 적절하다는 의견(사법지원책임관은 시설 개선, 장애인보조기구 비치 등 예산 관련 업무, 사법지원 교육, 각 과별 사법지원 통계 취합 등을 담당하므로 모든 과와 소통하고 예산, 교육 등을 주관하는 총무과장을 사법지원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 실무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법지원관을 배치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종합민원실장이 적절하다는 의견(사법지원에 대한 문의는 주로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지고, 사법접근센터나 우선지원창구가 종합민원실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총무과장보다 업무적으로 여유가 있음)
- 예규 제정 전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④ 공소장 등 장애정보 표기 방안 및 피고인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 ‘공소장 등 장애정보 표기방안’ 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장애인 등 사법지원을 하기 위해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전문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음
- **피고인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

- 장애·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피의자·참고인(이하 ‘피고인 등’)의 방어권 및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위해서 이들에게 적절한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 ● 피고인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규율 방법

- 형사소송법에 피고인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재판과정 참여 방법과 절차, 진술조력인의 지위와 의무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고인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관리 주체를 성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음
- 장기적으로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추가 의견 있었음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

### 1. 지향점

- 법원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여, 사법지원제도를 좀더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개선방안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의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사법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정보를 쉽게 습득하여 그에 기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